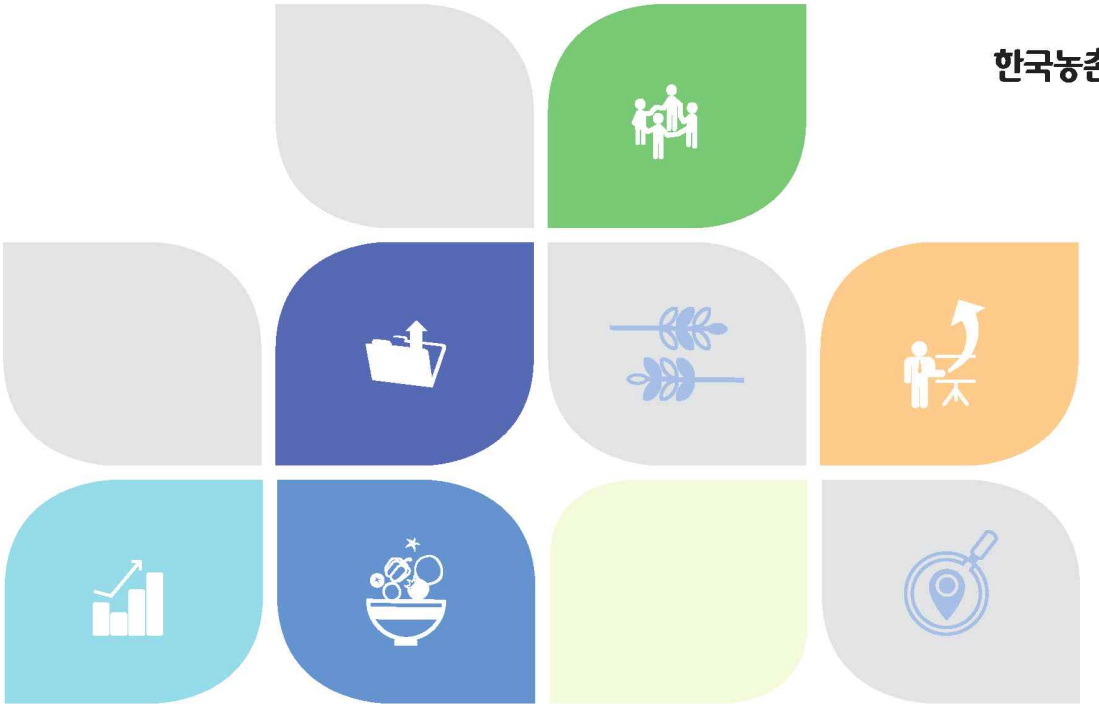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03-10

2016. 12.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정 섭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 도 채 부연구위원
정 문 수 부연구위원
김 용 욱 부연구위원
민 경 찬 연 구 원
유 은 영 연 구 원
이 정 해 연 구 원
정 유 리 연 구 원
정 희 라 연구조원

목차

CONTENTS

Chapter Ⅰ

일반 현황 / 1

Chapter Ⅱ

2016년 주요 업무 내용 / 11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51

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52

2. 조사·연구 업무

2.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93

2.2.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 44

2.3. 지역발전지수 산출·분석 ····· 45

2.4.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 46

3. 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

3.1.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발간 ·····37

3.2.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08

4. 정책 토론회, 컨퍼런스 개최 등

4.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78

4.2. OECD 국제회의 참석 ·····2

4.3. 해외 사례 조사 ·····9

5. 네트워킹 및 정책 지원 기반 구축

5.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1

5.2. 기타 삶의 질 정책 지원 업무 ····· 6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 질 향상 위원회)' 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협의 기구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정책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과 활동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시책을 종합한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추진 실적 평가, 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조정 활동을 담당한다.

2004.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05. 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2009.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201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2.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2014.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2015. 6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발표
2016. 1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2016.11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보조한 연구기관 등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의 환경 변화와 다변화하는 주민의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성과체계를 마련한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심층 평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DB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그 외에도 농어촌과 도시의 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와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농어촌 및 도시 주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2010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용 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2011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2011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문지원기관 관련 업무 수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20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201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2013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2014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4년 11월 21일)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2015년 ~ 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201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2015, 2016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2016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및 주민 만족도 조사
-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개요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제5장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근거 '15년 7월 1일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Ⅴ.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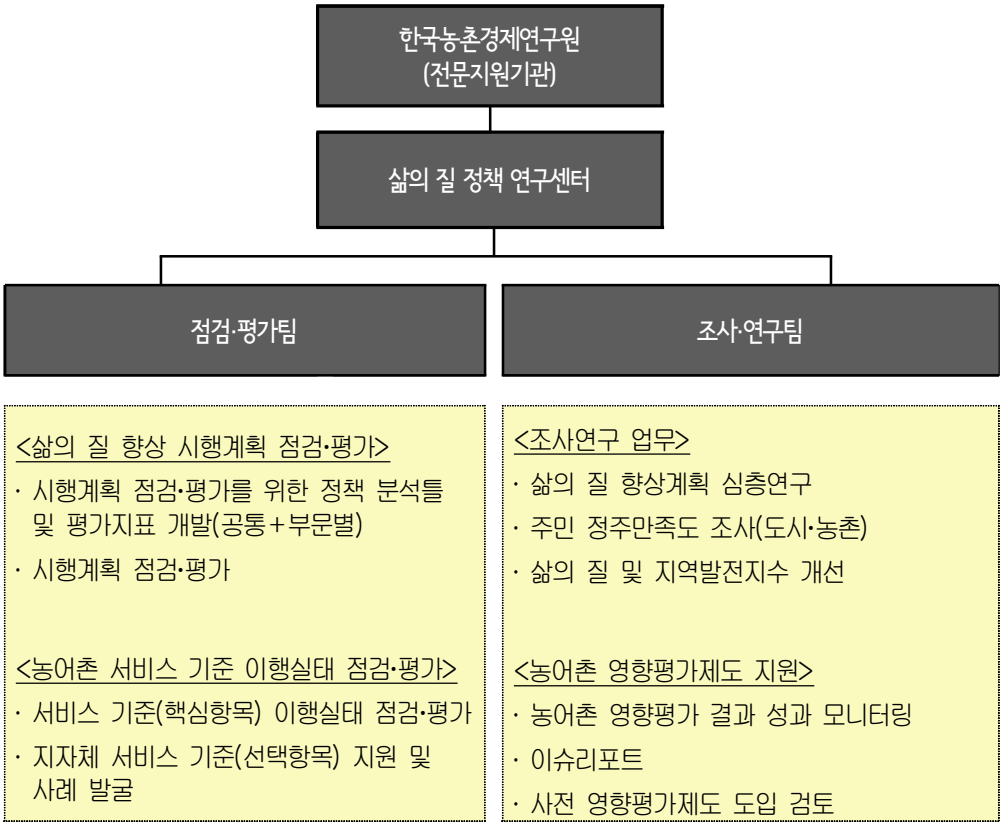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을 '삶의 질 정책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지역평가를 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원회에 의제를 제안한다.
-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부문별 세부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별 선택항목의 제도화를 점검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국가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영향평가단을 운영하여 주제별 이슈리포트를 발간한다.
- 네트워크 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확산하고 성과를 높인다.
- 그 외에도 지역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엮은 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등 성과 홍보와 확산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15~'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농어촌 맞춤형 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주체계별 기능을 강화한다.
-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삶의 질 정책 기조 변화>

구 분		과 거	미 래
이 념		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위한 도·농간 격차 완화	농어촌다움·농어촌 가치 중시, 주민체감 증진
정책 대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지역 공동체,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정책 범위		복지, 교육, 의료 등 필수사회서비스 확충	안전, 환경 등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 략		농어촌 지원 확대 부문별 정책 강화	농어촌 맞춤형·특화 정책, 분야 간 연계·통합 지원
	사회 서비스	HW 정비, 인프라 구축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공간정비	권역·마을기반 조성, 유형별 차등 보조	중심지 기능 및 마을과의 연계 강화, 先역량 강화와 역량 단계별 지원
	산업·일자리	도시 자본 및 투자 유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순환, 1·2·3차 산업 연계
정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협력, 관(官)주도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민간역할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평가 및 환류		하향식▸상향식	쌍방향 네트워크

□ 비전 및 추진기반

○ (비전)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한다.

○ (추진기반) 중앙정부는 부처 간 연계성을 높이고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며, 현장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높인다.

□ 부문별 목표

○ 기본 비전의 설정에 맞춰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 2차 계획의 지역역량 부문은 제3차 계획의 추진체계에 포함되었으며, 안전 부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 보건·복지
-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3. 정주생활기반
-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일자리
-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조성

CHAPTER

II

2016년 주요 업무 내용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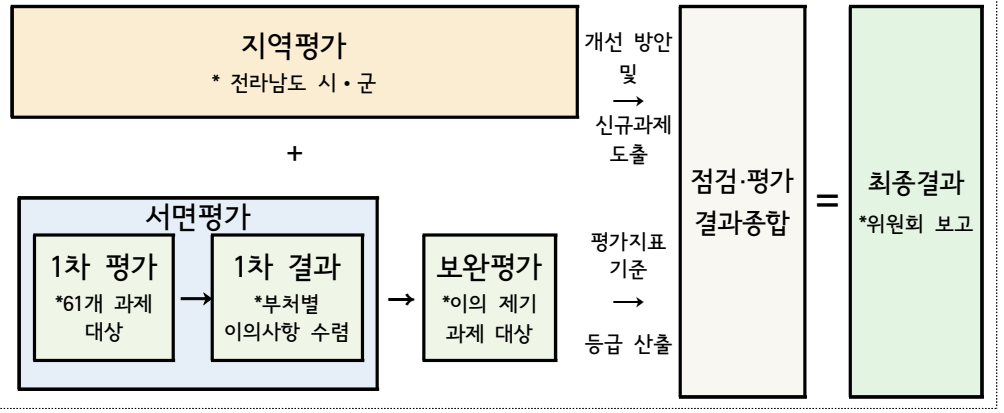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18개 부처·청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및 주민 체감과 만족도를 점검·평가하고, 개선 대책과 신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6년에는 '15년 시행계획 185개 과제 중 61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단위의 서면평가와 정책군·지역군 단위의 지역평가를 병행하여 과제 단위의 개선안뿐 아니라 정책군 단위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서면평가는 과제당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에 따라 과제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우수·부진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지역평가는 개별 사업 평가 중심의 서면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조사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정책군·지역군 단위의 종합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 평가 체계 >

서면평가와 지역평가를 병행하되, 이의제기·보완을 통해 투명성, 객관성 보강



❖ 부문별 평가 주요 결과

□ 보건 · 복지 부문

○ 서면평가 결과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6개 세부과제의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전체 평균 86.5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농어업인 노후 안정 농지연금',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과제는 우수,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 및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 '두루누리사업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과제의 경우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 빈곤층 생활안정에 기여가 큰 과제이나, 정책 대상자 선정 등에서 농어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 산지담보 연금 도입 검토 과제의 경우 사업시작 이전 단계에서 연구용역 결과만 제시하고 있어 성과 평가가 곤란했다.

○ 지역평가에서는 전남 영암군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6개 과제에 대하여 주민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지원 등 주요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는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기능별로 분화된 공단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 중이었다.
- 지자체에 삶의 질 향상 전담 조직이 없어서 '두루누리사업,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 해소' 과제는 사업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이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였다.

> **<군청 두루누리 사업 담당자 인터뷰 내용 중>**
> "군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실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은 군청을 거치지 않고 공단을 통해 직접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실태를 잘 알지 못한다."

○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는 '지자체의 삶의 질 전담 부서 지정'과 '농촌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이었다.

- 도·시·군 단위 지자체에 농어업인 삶의 질 전담 부서를 지정해 중앙-도-시·군 단위 효율적 업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두루누리사업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과제의 시행계획 수립 시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목표치를 개발하여 반영해야 한다.

□ 교육 부문

○ 서면평가 결과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에 포함된 5개 세부과제 평가 점수 평균은 73.86점으로 전체 평균(86.5점)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과제의 평가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과제는 보완이 필요했다.

*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간 적정한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 마련이 부족하였다.

* ‘ICT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사 연수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한 원격(사이버) 연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평가는 전남 나주시를 대상으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확충(거점중학교 육성), ICT 인프라 구축 등 2개 세부과제를 평가하였다.

– 나주시는 ‘세지중학교’를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초·중학교에 노트북, 스마트패드, 무선 AP망 등 디지털 수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ICT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나주 교육청과 학교 간 협력관계가 미흡하고 정부 재정지원 종료 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ICT 활용 교육이 전면 중단 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거점 우수 중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나주 세지중 >

전교생 1인 1악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2개 기관(면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우체국, 어린이집, 농협, 실버타운, 호남대, 전남청소년수련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야구위원회, 무안송계어촌체험마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였다.

○ 교육 부문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간 협업체계 및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 통학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별 지역 여건에 맞춰 통학여건을 개선하려면 지자체에 적합한 모델 개발과 지자체의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ICT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려면 교사 연수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한 원격 연수 확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별 학력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확대해 학생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 학생 수가 적은 실정을 감안해 학생별 학력 수준과 특성을 진단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와 학교 간 연계 강화’ 시 주민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과 지역의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특기적성 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어촌 지역 평생 교육 환경 개선’ 시 고령화, 다문화, 여성 농민 등 계층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관리가 중요하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 서면평가 결과 ‘정주공간활성화·농어촌 생활권 구현’에 포함된 8개 세부과제 평균 점수는 93.2점으로 전체 평균(86.5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정비’, ‘생활권 연계협력 확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 대부분의 과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미비했다.

* ‘농어촌 주택정비’는 주택정비율(주택개량자금 대출건수/계획 물량)이라는 양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국고여객선 건조’는 사업예산 대비 집행금액의 비율로 성과를 측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도서민 수송실적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지역평가는 전남 해남군을 대상으로 '정주공간 활성화·농어촌 생활권 구현' 관련 세부과제를 평가하였다.

– 대중교통이 취약한 해남군 교통 개선을 위해 지리 여건, 인구 구조 등을 반영한 '해남사랑택시'를 운영(주민 2,288명 중 만65세 이상 782명)하고 있었다.

< 해남사랑택시 운영 사례>

해남지역 11개면,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3대의 '해남사랑택시(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차량유지보수, 운행손실보상, 유류비 등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정주생활기반 부문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국토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 업무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수선유지 급여 전달체계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 '농어촌 주택정비', '국고여객선 건조' 등 경관개선 관련 과제들은 양적인 지표를 넘어 농촌 지역 주거경관, 친환경주택보급 등 질적인 측면의 성과지표 개발이 시급하다.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의 경우 추진상황을 모니터링·점검하여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농촌중심지 활성화' 의 경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경제활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17년 농어촌(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

–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타 부처 연계사업(지붕개량비 지원)에 사용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량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6차산업화 기반마련' 관련 12개 과제에 '창업촉진·역량강화' 관련 5개 과제를 더하여 총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서면평가를 수행하였다.

– '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6차산업 모델 정착', '농촌전통지식 발굴

및 활용지원', '6차산업화 창업지원', '로컬푸드 확산'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농업인의 제조·가공 활동 규제완화'는 보완이 필요하였다.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은('15누계: 7개소)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표로 삼고 있어 실질적인 제품 생산·판매 성과로 보기 어렵다.

○ 전남 강진군의 6차산업화 기반 마련 관련 과제 추진과 장성군의 창업촉진·역량강화 과제 추진 실태를 대상으로 지역평가를 실시하였다.

- 강진군과 장성군의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7개소/6개소)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차산업화가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
- 강진군의 경우 '6차산업화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중앙정부 사업이 없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6차산업 정책 추진 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6차산업 인증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다.
- 6차산업 육성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사업이 많은데 완공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하였다.

○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는 6차산업지원센터 역할 확대 및 정책 수혜자 확대 등이었다.

- 6차산업지원센터 역할 확대를 통한 관련 지원체계 일원화 및 6차산업 관련 지원이 전국에 걸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6차산업 창업지원 관련 교육프로그램 다양화(가공 창업을 위한 HACCP 기준 등 심화과정 운영), 창업보육·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

□ 문화 · 여가 부문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관련 9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 '문화이모작 조성',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지역문화지수',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 인력('15: 229명)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부족했다.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은 농어촌 지역 체육시설 확충 측면에서 삶의 질 정책에 부합하나, 성과 지표가 적합하지 않았다.

○ 전남 장흥군에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지역평가를 진행하였다.

- 장흥군 공공도서관 건립 이후 장서류 수시 추가 구입, 다양한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한자교실, 독서교실, 체험형 동화마을 등), 야간 개방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편익을 주는 활동이 있었다.
-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인력지원 기준, 작은 도서관 합동평가 지표, 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기준 등에서 농어촌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시설 운영 및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 장흥군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제 사례>

- 작은 도서관에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하나 '전산화' 지표를 동일하게 평가하며, 그 외에도 불리한 지표들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고 예산 지원에서도 배제됨.
- 문화부의 야간 인력 채용·지원 기준을 주 40시간 근무 및 사서자격증 소유자로 제한. 그러나 장흥군에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주민이 없어 문화부 지원 받는 것이 불가능.

- 교육청 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문화부)의 소관 부처가 달라 휴관일 조정, 관련 도서 공유·상호 대차시스템 구축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는 과제와 관련 있는 '중앙부처 및 기관의 협력 강화'이다.

- 문화·체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 도서관, 영화관,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상호 대차시스템 구축, 동일 지역 내 동일 기능 시설 관리 역할 분담, 공동 사업, 휴관일 및 야간 개방시간 조정 등 문화·체육시설 활용 관련 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하다.

□ 환경·경관 부문

○ '농어촌 어메니티 체계적 관리'에 포함된 8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는 우수 과제로 평가되었다.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확대'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였다.
  - *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확대': 경관보전협약체결 실적이 없으며, 지역주민의 경관 가꾸기 중요성·필요성 인식을 통한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유산 지정·관리', '농어촌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과제는 성과측면에서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부족하였다.

○ 전남 완도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어메니티 체계적 관리' 관련 8개 세부과제대하여 주민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완도군은 '슬로시티 청산도'를 비롯해 청정 바다 경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청산도 구들장논은 '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농어촌 생태 경관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로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 청산도의 농촌 어매니티 관리 우수 사례 >**
> 청산도는 '가고싶은 섬' 및 '슬로시티' 지정, '경관보전직불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 청산도 문화·역사·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보전활동을 촉진한 중요 사례

- 청산도 구들장논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완도 생태숲을 조성해 숲해설, 생태관광, 목공예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숲해설사 인건비 등)이 줄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 구들장논 소유자에 대한 지원, '소유권 공동신탁제도' 도입 및 지속적 보전관리 전담책임 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

○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는 과제와 관련 있는 중앙부처 및 기관의 협력 강화, 과제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 성과지표의 개선 등이다.

-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어촌 관광 관련 부처(환경부·농식품부·행자부·산림청 등) 간 협력 강화 및 사업추진자(농업인·관리자·관광객 등)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유산 지정·관리’, ‘농어촌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과제에서는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수적이다.
- ‘경관직불제 개선’의 경우 사업 목표를 고려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연계프로그램 개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성과지표를 보완해야 한다.
- ‘농업유산 지정·관리 사업’에서 유산 발굴, 농촌다움 보전,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하며, 성과 확산을 위해 제도 자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안전 부문

○ 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관련 8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 ‘수리시설 안전관리’,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은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과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미정비 소하천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비 완료지구 재해발생 현황 조사결과를 비교·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방안이 없었다.

○ 전남 나주시를 대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 ’17년까지 나주시 관내 전체 소하천 정비(147개소, 214km)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소하천 주변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효과 확인하였다.
- 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 위험지역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안전 부문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수리시설 안전관리’, ‘소하천 정비’, ‘농경지 침수예방’ 등의 과제는 예산 감소,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하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국민안전처·농식품부 간 협업을 통해 재난·재해 안전 관련 업무의 이중적 관리 구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자연재해 관련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중요하다.

< 부문별 평가 대상 및 서면평가 결과>

부문	평가 지역	과제	세부 평가 과제	서면 점수
보건 복지	영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외 5개	83.1
교육 여건	나주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외 4개	73.1
정주 기반	해남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외 7개	93.2
경제 활동 일자리	강진	6차산업화 기반 마련	'6차산업 모델 정착' 외 11개	83.0
	장성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	'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외 4개	92.7
문화 여가	장흥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농어촌 작은영화관 조성' 외 9개	87.0
환경 경관	완도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업유산 지정관리' 외 7개	87.7
안전	나주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강화	'소하천정비사업' 외 7개	90.4

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개요

○ 정부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충족하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항목과 세부 내용, 항목별 서비스 기준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공표하였다.
- 정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4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국가가 관리하는 7개 부문 17개 항목의 '핵심 항목'과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선택 항목'으로 2원화되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를 개편하였다.
-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을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7개 부문으로 편성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의 7대 부문과 일치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 2015년부터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한하여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선택 항목'은 9개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에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다(2016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 지자체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를 원활하게 점검·평가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 시·도 연구원 간 MOU를 체결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개편 이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1년	⑴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⑵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지수	⑶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⑷ 사례지역 심층조사
2012년		⑶ 농어촌 서비스 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⑷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선안 마련 ⑸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총괄팀'의 별도 자료집 발간
2013년	⑴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⑵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지수	⑶ 농어촌 서비스 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⑷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운영 평가 ⑸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제시
2014년	⑴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⑵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지수	⑶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편안 마련 ⑷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개선 방안
개편 이후	**국가 관리 '핵심 항목'**	**지자체 자율 '선택 항목'**
2015년	⑴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⑵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⑴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9개 시·도 연구원 ⑵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2016년	⑴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⑵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⑴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7개 시·도 연구원 ⑵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수정 및 목표치 확정,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 주요 추진 내용

□ 2016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항목 주요 내용

○ 핵심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서비스이다. 따라서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한다.

- 핵심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로 현재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중기 목표치를 현 시점에서 달성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 중기 목표치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19)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2014년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향후 5년 동안의 기준치(baseline)로 삼았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7개 분야 17개 항목(22개 세부기준)에 대해 통계청 승인 공표통계, 각 부처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31개)를 활용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 해당 자료는 자료수집 기간 당시('16. 9월～12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되,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인 2010년 통계를 사용하였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ⅰ)전국사업체조사(읍·면단위 제공)	공식 통계
			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 통계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	행정 조사
	2) 응급 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국민안전처: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 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 포함)	공식 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 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ii)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 통계

2. 교육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3. 정주생활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 수/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미래창조과학부: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활동 일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행정조사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협조자료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생활안전)	15)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행정조사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수 / 총 건 수) × 100	국민안전처: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 2016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전반적인 기준 달성 정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응급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항목에서 모두 기준 달성도가 감소하였다. 이 중 진료서비스의 기준 달성도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 교육 부문의 경우, 농어촌의 평생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초·중학교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0.7%p 상승한 71.8%를 달성하여 현상유지 정도에 그친 반면, 학생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전년 대비 8.1%p 증가하여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는 비교적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 반면, 읍·면별 평생교육 여건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기준의 중기 목표가 40%이지만 현재 19.7%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마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결과이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전반적인 기준 달성률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 상수도, 난방, 광대역 통합망 항목 모두에서 기준 달성률이 향상되었다. 특히 광대역 통합망 항목의 경우 달성률이 전년 대비 7.0%p 가량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기 목표인 90%를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주택과 대중교통 항목은 5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달성률 변화를 점검할 수 없었다.

○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 목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안전 부문은 관계 부처의 자료 협조 미흡으로 이행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시·군별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문화·여가 부문), 하수도 항목(환경·경관 부문)은 목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다.
- 안전 부문은 방범설비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7.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반면, 나머지 두 항목, 즉 경찰 순찰과 소방 출동 항목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2015년 대비 2016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목표 달성률의 향상 여부를 살펴보았다. 향상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수는 9개, 하락한 것은 4개,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4개였다.

– 목표 달성률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3개 기준 항목 중 향상된 항목의 비중은 69.2%이며, 하락된 항목의 비중은 30.8%이다.

<2016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5	2016	15-16 증감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76.8	73.9	↘
	2)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98.4	98.6	↗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71.8	70.1	↘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69.7	69.2	↘
2. 교육 여건	5) 초·중 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71.1	71.8	↗
	6) 평생 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21.8	19.7	↘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	–	X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67.8	69.3	↗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53.1	57.0	↗
	10) 대중 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	–	X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85.8	92.8	↗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67.3	67.4	↗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5	2016	15-16 증감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91.3	92.0	↗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80.8	81.0	↗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35.8	43.2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41.1	-	X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2)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과 대중교통 항목은 5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달성률 변화를 점검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목표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기준 항목별로 2019년까지 달성할 중기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시·군의 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이상 보건·복지), 평생교육(교육) 등 4개 기준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평생교육,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등 8개 기준항목에서 중기 목표 기 달성 지역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노인, 영유아, 평생교육, 방범설비 기준항목에서 중기 목표 기 달성 지역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응급서비스, 초·중학교,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등의 기준항목의 이행실태가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지역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에는 개별 시·군이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기준항목일지라도, 해당 서비스 공급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항목 중기목표치 달성 시·군 현황>

부문	핵심 항목	군(82개)		도농복합시(56개)		전체 농어촌 시·군(138개)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51	47	55	55	106	102
	2) 응급서비스	64	42	53	55	117	97
	3) 노인	11	9	11	2	22	11
	4) 영유아	27	26	33	31	60	57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11	12	8	9	19	21
	6) 평생교육	8	7	16	14	24	21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0	0	3	3	3	3
	8) 상수도	16	16	16	16	32	32
	9) 난방	4	9	22	22	26	31
	10) 대중교통	0	0	1	1	1	1
	11) 광대역통합망	38	59	34	41	72	100
4.경제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53	43	40	50	93	93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75	73	51	54	126	127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7	6	28	30	35	36
7. 안전	15) 방범설비	13	21	11	8	24	29
	16) 경찰 순찰	-	-	-	-	-	-
	17) 소방 출동	20	-	8	-	28	-

주 1) 응급서비스의 경우 2015년은 전체 138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데 반해 2016년에는 소방서가 입지한 114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2) 난방 항목은 읍지역이 없는 3개 시·군(옹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 2015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총 13개 기준항목 중 2016년에 9개 도 전 지역에서 모두 이행실태가 향상된 기준항목은 2개 항목이다.

-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상수도 항목의 경우 9개 도 모두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이행실태가 향상되었다.
- 이 외에도 난방, 광대역통합망,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하수도, 방범설비 등 5개 항목에서 8개 도의 이행실태가 향상되었다.

○ 노인, 영유아, 평생교육 등 3개 기준항목은 5~8개 도에서 전년 대비 이행실태가 낮아졌다.

- 노인 항목의 경우 경상남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낮아졌으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목표 달성률 하락 정도가 7.1%p로 가장 크다.
- 영유아 항목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전년 대비 이행실태 수준이 낮아졌다.
- 평생교육 항목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하락하였다.

○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대부분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인천시의 군 지역(강화·옹진)은 진료서비스,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등의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특히 진료서비스 항목의 목표 달성률은 0.0%이다.
- 부산시의 군 지역(기장)은 노인과 초·중학교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그 외 대도시의 군 지역(달성·울진)은 모든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경기도는 모든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보였다.

- 그렇지만 노인, 초·중학교, 상수도,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방범설비 등의 일부 기준 항목에서 중기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이행실태를 보였다.

○ 강원도는 주로 정주생활기반 부문과 안전 부문 등 총 6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서비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등 매우 다양한 부문 및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특히 안전 부문 방범설비 항목의 목표 달성률은 26.9%로 9개 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나타냈다.

○ 충청북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총 6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영유아,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와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특히 초·중학교 항목의 경우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충청남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부문의 총 5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노인,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상수도와 난방,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전라북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8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난방과 광대역통합망,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전라북도의 경우 보건·복지 부문의 이행실태가 타 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총 10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가장 많은 기준 항목인 총 10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으며, 하수도 보급률(환경·경관 부문)이 9개 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총 10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영유아,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와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특히 경상북도는 주택, 대중교통,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하수도 등 총 4개 기준항목에 대해 9개 도 중 가장 낮은 이행실태 수준을 보였다.

○ 경상남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안전 부문의 총 8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노인과 영유아,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와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난방, 대중교통,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특히 경상남도는 교육 부문의 영유아 항목에서 9개 도 중 가장 낮은 이행실태 수준을 보였다.

○ 제주도는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총 3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주택, 난방, 광대역통합망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지만, 다른 기준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특기할 점은 제주도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가 0.0%라는 점이다.

2. 조사·연구 업무

2.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2.2.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2.3. 지역발전지수 산출·분석

2.4.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2.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개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정책의 차별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삶의 질 정책 개선 및 발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제2기 삶의 질 계획 기간 동안 연구 차원에서 2011년부터 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수행하였다.

–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농어촌 인지적 관점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사전적 점검 기능은 미비했다고 평가된다.

*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과제('11~'14)

'11년: 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

'12년: 평생학습, 응급의료

'13년: 에너지복지, 정신보건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 주택바우처

'14년: 장애인복지정책, 폐기물관리정책

○ 제3기 삶의 질 계획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 기존에 운영한 영향평가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유사 평가 제도를 검토하여 사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방안 및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최종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조치 내용이 정책에 환류 되도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 학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농어촌에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체계 개선 방향

○ 사전영향평가를 원활하게 도입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 확보, 풍부한 이론 연구와 자료 수집, 전문가 및 국민들의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체계적 영향평가틀 구축) 영향평가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전문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지원 네트워크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영향평가 결과가 해당 정책에 환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사전영향평가 실시) 사전영향평가 체계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초기에는 영향평가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여 기관 확대)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삶의 질 정책 연구 네트워크의 국책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에 전문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체계 구축 내용

○ 전문지원기관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농어촌 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조치 내용이 정책에 환류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의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1) (영향평가 대상 후보 과제 발굴 및 선정)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촌에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이슈를 발굴하고 선정한다.

- 이슈 탐색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조사한다.
- 구체적으로 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농어촌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수집(설문조사 등), ②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정부 부처의 당해 연도 업무보고의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 등)하여 핵심 정책 키워드를 수집한다.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중요성 및 시의성을 평가하여 이슈를 선정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은 사무국, 민간 전문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

2) (영향평가 실시)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선정한 이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해당 이슈를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를 생성하고,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에 평가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선정한 이슈가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영향평가 검토서'를 작성(사전 영향평가 개념을 도입)한다.
- 생성한 분석 자료와 영향평가 검토서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간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3) (전문 영향평가 수행) 해당 이슈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면 삶의 질 정책 연구 네트워크 참여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문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는 9개 국책연구기관 및 9개 시·도 연구기관이 참여

4) 전문지원기관은 해당 이슈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와 정책 개선 과제를 취합 정리하여 사무국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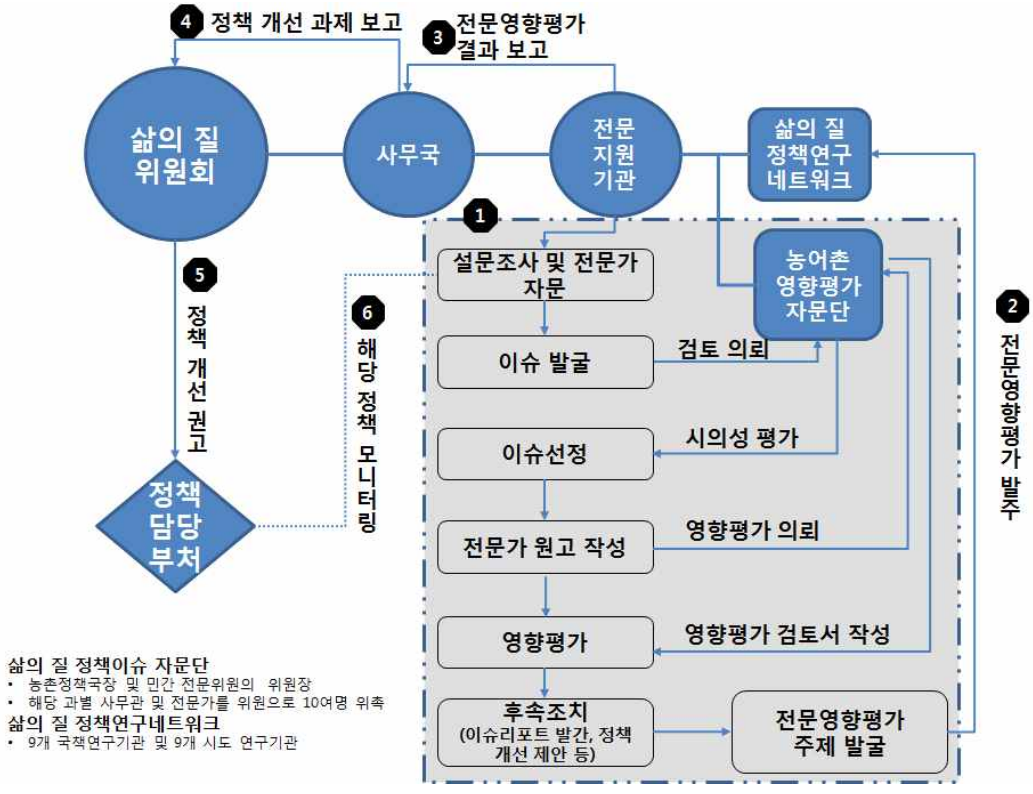
5) 사무국은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삶의 질 위원회에 보고한다.

6) 삶의 질 위원회는 정책 개선 사항을 해당 부처에 권고하여 농어촌에 차별적인 사항을 개선토록 한다.

7) 전문지원기관에서는 해당 정책이 개선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새로운 영향평가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난 후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소개 및 변천사의 내용을 담은 '사전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추진방안 제안'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프로세스>



□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내용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위의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2개의 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농어촌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KREI 리포터, 삶의 질 현장자문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이슈 12건을 발굴하였다.

* 주요 이슈: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 규제프리존 특별법, 장기요양(재가복지), 고향세 도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에너지바우처, 평생교육단과대학, 공공산후조리원, 최저임금제도, 김영란법, 중학교 자유학기제

- 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에 이슈 검토 및 발굴 의뢰서를 2회 발송하여 전문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이슈를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2개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이슈

    ①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② 규제프리존 특별법

- 2개 이슈별로 각각 2편의 분석 자료 원고를 해당 전문가에 위탁하여 작성하였고,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에서는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 이슈에 대해 영향평가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슈는 후속 조치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2.2.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 개요

○ 지역의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동지역을 도시로, 읍면지역을 농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
-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및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연도별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추이를 확인하고 정책 부문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은 도시 주민 950명, 농어촌 주민 2,337명으로 총 3,287명이다.
-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2일 동안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전화 인터뷰 조사에 해당하는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로 진행하는 방법과 온라인 조사(Online-survey)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통신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전국 17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 본 수	▪ 총 3,287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1.71% Point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표본 추출	▪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2016년 10월 6일 ~10월 28일

○ 조사 항목

– 농어촌과 도시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와 7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과 이주 이유 등에 대해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 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삶의 질 만족도	○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만족도(행복감) ○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별로 2~5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구 분	세부 항목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 거주 지역 ○ 거주 기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 자가용 차량 소유 유무 ○ 가족 구성 ○ 가구 소득 ○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 ○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여부(귀농·귀촌한 경우, 년 수) ○ 마을 일(해사나 모임)에 대한 참여도

- 삶의 질 향상 7대 부문별 정주 만족도 세부 항목 문항이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성과지표의 내용과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15년도의 문항에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 '16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문항

    · 정주생활기반 부문 1문항 –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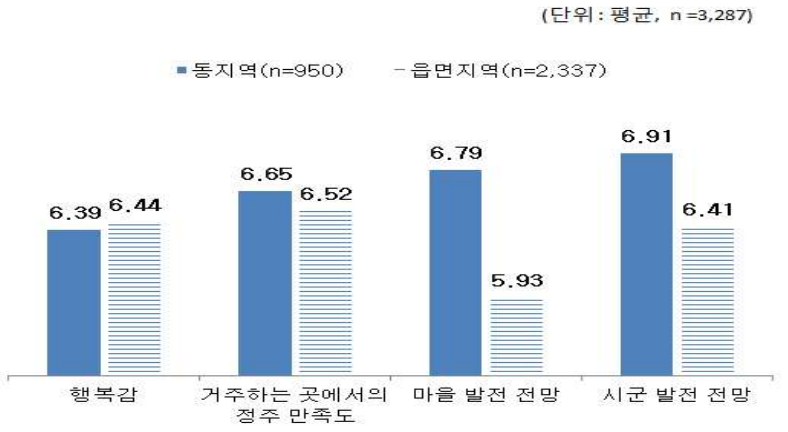
    · 안전 부문 2문항 –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한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 지역 주민보다 농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주민은 시·군의 발전 가능성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 2012년부터 조사한 농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추이를 확인해 보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조사 결과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의 발전 가능성',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역시 만족도 평균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최근 불안한 국내 정세의 영향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만족도가 하락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 고
2012년	3.25	-	3.23	3.71	5점 척도
	(65.0)	-	(64.6)	(74.2)	
2013년	3.38	3.36	3.11	3.53	5점 척도
	(67.6)	(67.2)	(62.2)	(70.6)	
2014년	6.08	6.34	5.06	6.26	11점 척도
	(55.3)	(57.6)	(46.0)	(56.9)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 고
2015년	6.69	6.71	6.23	6.72	10점 척도
	(66.9)	(67.1)	(62.3)	(67.2)	
2016년	6.44	6.50	5.97	6.42	10점 척도
	(63.8)	(65.0)	(59.7)	(64.2)	

주) 1. 95% 신뢰수준에서 조사의 표본오차는 2012년 ±5.2%p, 2013년 ±3.8%p, 2014년 ±3.59%p
2.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3. 괄호 안은 100점 만점 환산 점수(2014년의 경우(평균점수×100)÷11로 계산).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7대 부문 전체의 평균점수는 5.62점으로 조사되어 2015년도와 같았다.

-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6.57)과 정주생활기반(6.20)이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5.94), 환경·경관(5.82)이 중간 이상 정도였다.
- 교육(5.37), 경제활동·일자리(4.83), 문화·여가(4.63) 부문은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문화·여가 부문이 가장 낮았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모든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 조사에서는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 '보건·복지'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0.03점,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0.18점,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0.06점 상승하였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이 특히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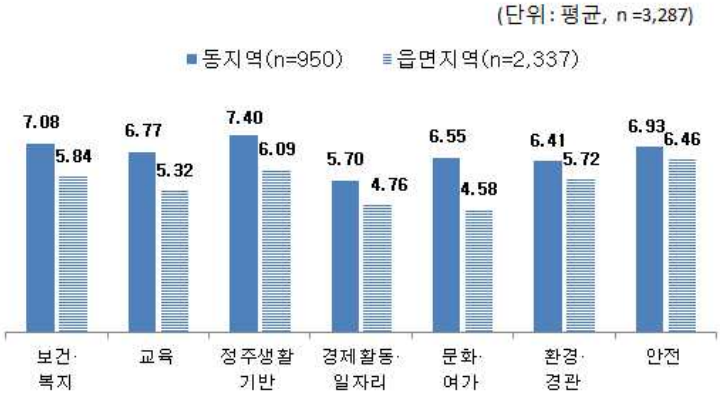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보건복지	5.69	5.62	5.91	6.19	5.94	6.36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81		5.87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16		5.65		5.51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74		6.02		5.9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88		5.92		6.00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4.94	5.27	5.48	5.72	5.37	5.63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5.49		5.29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68		5.26		5.20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5.29	5.78	6.01	6.52	6.20	6.35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4.97		5.75		6.09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4.82		6.10		6.03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57		5.70		5.8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6.71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6년 신규)
경제활동일자리	4.28	4.15	4.77	4.62	4.83	4.76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55		4.89		4.95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29		4.83		4.77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3.15	3.55	4.69	4.80	4.63	4.76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77		4.59		4.5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환경 경관	5.79	5.72	5.90	6.30	5.82	6.2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04		5.08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83		6.36		6.18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53	6.73	6.61	6.70	6.57	6.73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7		6.32		6.36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34		6.81		6.96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42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2016년 신규)
						5.87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2016년 신규)
전체	5.09		5.62		5.62		

주) 1.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 2016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도시와 농촌 주민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도시 지역의 주민에 비해 농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그 중에서도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컸다.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 도시 지역 응답자의 57.4%, 농촌 지역 응답자의 41.3%가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농촌 지역 주민의 이주의향이 도시 지역에 비해 더 낮았다.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를 이주 희망 이유로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문화·여가생활 여건'과 '자녀교육 환경'을 이유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응답비율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보건·의료 환경'이었다.

□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2016년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5.6점(10점 만점)이며,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6.2점에 해당한다.

-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확인해보면,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16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단위: 점)

□ 소결 및 시사점

○ 주민이 주체적으로 농촌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중심의 발전 전략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발전을 꾀하고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우수사례들을 홍보함으로써 농촌 주민에게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 농촌 지역에서 인구 유출과 인구 과소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소득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농촌 지역 주민은 보건·복지 부문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 주민 중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이주희망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 문제와 소득기회의 부족 문제가 주된 것으로 꼽히고 있다.
- 즉, 농촌 지역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주민들이 농촌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양육 및 보호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 지역과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해야 자녀를 둔 가족의 농촌 거주를 촉진할 수 있다.

- 정책 부문 중 교육 부문이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들 중 이주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주의향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농촌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음 세대의 발전과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문 농업경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방과 후 교육이나 사교육 측면에서 도시 지역과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녀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농촌만의 강점을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개발해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 농촌주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농촌주민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2012년 조사에서부터 계속 문화·여가 부문의 중요 순위는 낮게 나타난 동시에 만족도 평균 점수도 7대 부문 중에 가장 낮았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도시 지역의 문화·여가 부문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농촌 지역의 만족도는 하락해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작업에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16년도 조사에서는 삶의 질 계획 부문별 성과목표·지표 중 정주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조사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안전 부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세부 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안전 부문의 세부 항목들 중 해당 항목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도시와의 격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 지역에서의 주요 경제활동인 농작업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2.3. 지역발전지수 산출·분석

❖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7년, 2008년 2년간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를 자체 연구과제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 2012년에도 이전 년도 연구를 승계하여 지속적인 지표를 산출하였고, 2014년에는 기존 지표를 일부 조정하여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였다.
- 지표를 통해서 시·군의 상대적인 현황 진단,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하였다.

○ 2016년에는 객관적 지표인 RDI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도와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도,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 발전 전망, 시군의 발전 전망 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2016년 RDI 기본 구조는 기존 RDI의 기본개념과 틀은 유지하되, 지표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지역발전지수(RDI)는 위의 4가지 부문별 지수의 합으로 정의된다.
- 각 영역별 발전정도를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 진단, 상호 비교를 시도하였다.
  *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 쉼터: 삶의 여유공간 지수
  *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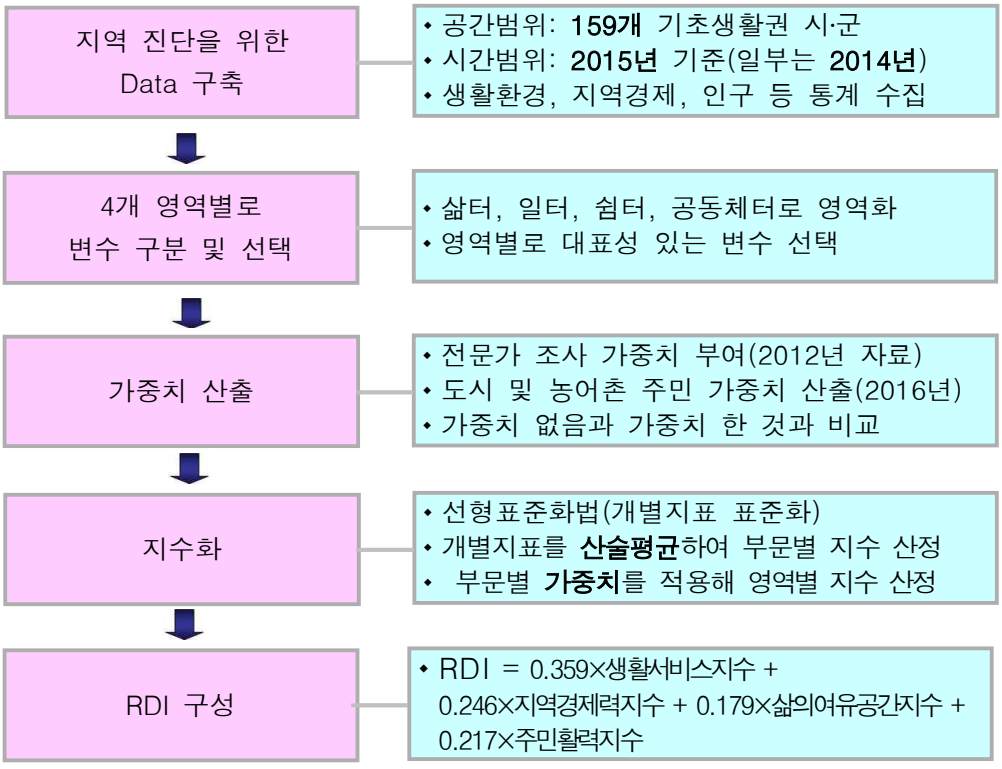
○ 객관적 통계 자료만을 기반으로 각 부문별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변수를 20개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 변수의 값은 선형 표준화를 수행하였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부문별 지수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역발전지수의 지표 구성>

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부호
삶터: 생활 서비스	기초생활 여건	- 노후주택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비율 - 식수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 상하수도 보급률	(-) +
	교육 여건	- 공교육 기반: 1㎢당 학교 수(초·중·고) - 사교육 기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 +
	보건·복지 여건	- 의료서비스 질: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 의료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노인복지기반: 1㎢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 +
일터: 지역 경제력	산업기반	- 사업체 기반: 총 사업체 수 - 경제활동력: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 + +
	주민소득 수준	-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
	지자체 재정력	-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쉼터: 삶의 여유 공간	녹색 휴양 기반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녹지 기반	- 녹지확보율: 녹지율 (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문화 휴양 기반	-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
공동체의 터: 주민 활력	인구변화	-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06-13년)	+
	인구구조	- 고령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인구활력	- 조출생률: 연앙인구 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지역발전지수 개발 과정 및 방법>



❖ 주요 추진 내용

□ 2016년 지역발전지수 영역별 분석

○ 생활서비스 지수는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지여건으로 구성된다. 주택, 상·하수도 등의 기초생활여건, 학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반, 보건 복지 서비스 수준을 대표하는 9개 변수를 종합하였다.

○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지역에 경기도 시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목포시, 창원시 등 비수도권 중심도시들이 상위에 있다.

– 상위 30%지역(50위) 중에는 83개 군 지역 중 3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일반시 20개 모두가 상위 50위에 포진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 55개 중 27개 지역이 상위

지역에 포함되어 생활서비스에서 도·농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 원활한 생활서비스 공급에는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군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 지역경제력 지수는 산업기반,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기반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사업체 및 사업체 변화율, 일자리 수, 지방 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로 각 부문을 측정하였다.

○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지역은 주로 서울과 부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남부, 그와 인접한 충청권 북부 지역에서 경제력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 상위 50개 지역에 포함된 군은 총 13개로 수도권의 확장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충청권 군인 진천군, 음성군 등과 울주군, 기장군 등 대도시에 인접한 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전주시에 인접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완주산업단지가 있는 완주군, 충북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군과 음성군이 상위 50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어 혁신도시 등의 안착이 지역 발전에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0위권에 포함된 함안군, 정선군, 청양군의 경우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서비스업 분야의 단독 사업체가 다수 증가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삶의 여유공간 지수는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체육기반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문화시설 분포, 체육시설 분포 등의 지표로 각 부문의 여건을 측정하였다.

○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강원·충북·경북 등의 산간지역과 동해안, 서남해안 등 다도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앞의 두 지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지역은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농촌의 장점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여유로운 전원생활과 가족 및 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증가하면서 삶의 여유 공간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선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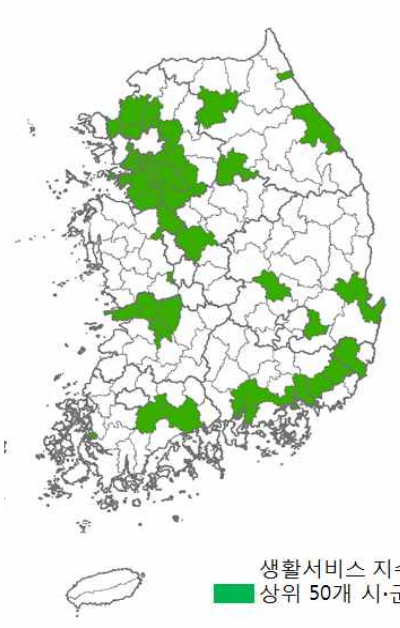
-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 지역에 포함된 일반시는 태백시, 동해시 등 강원 지역과 수도권 과천시로 다른 도시에 비해 산림, 바다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 주민활력 지수는 인구변화(인구 증가율), 인구구조(고령화율), 인구활력(출생률) 부문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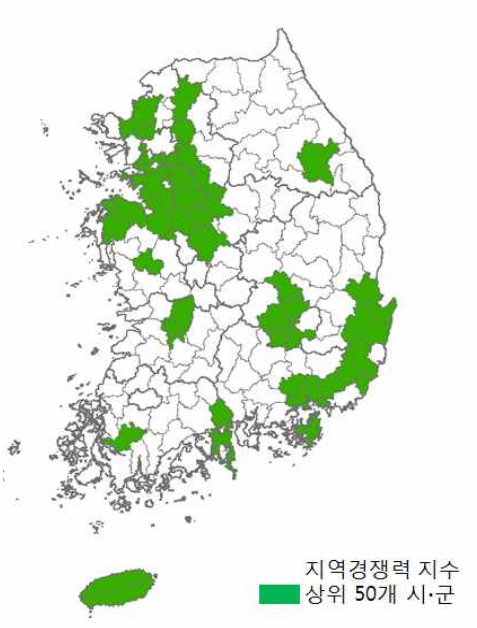
○ 주민활력 지수 상위권 지역은 주로 수도권남부와 충청권 북부 그리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접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 상위권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등 광역시 내 군 등이며 진천군, 완주군 등 혁신도시가 입지한 군 지역에서 주민활력 지수가 높다.
- 특히 완주군의 경우는 젊은 귀농·귀촌자들이 다수 유입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15.11월말 기준으로 총 911세대의 귀농·귀촌자가 있는데, 그 중 40대 이하가 51.7%를 차지).
- 주민활력지수의 상위권은 대체로 지역 경제력 지수 상위권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인구 유입과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영역별 상위 50위 시·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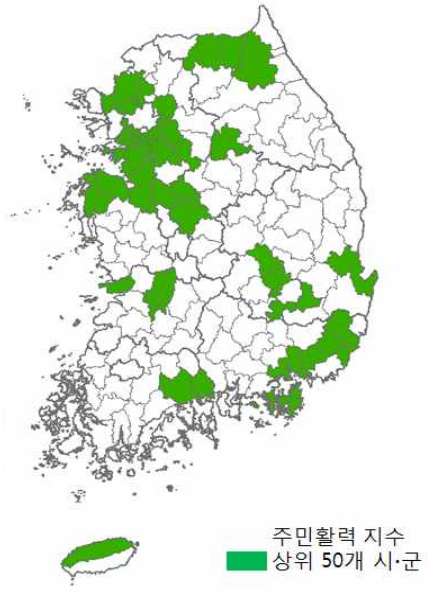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쟁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

□ 2016년 지역발전지수 분석

○ 4개 영역별 지수를 종합하여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였다.

- 종합지수는 영역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종합하였다. 가중치는 2012년, 2014년 지역발전지수와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 지역발전지수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와 그에 인접한 충청권 북부지역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 주로 분포한다.

- 상위 50개 지역 중 도농복합시가 ('14년)27개 → ('16년) 26개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시가 ('14년)18개 → ('16년) 16개, 군이 ('14년) 5개 → ('16년) 8개로 변동되었다.
- 청주시가 일반시에서 도농복합시로 변경 된 것과 지난 14년에 50위 안에 있던 순천시가 50위 권 밖으로 밀려나 50위 안에 있는 일반시의 개수가 감소하였다.

○ 지역발전지수 상위 10위에 포진한 시·군은 대부분으로 지난 2014년에도 상위 10위에 있던 지역들이다.

- 2016년 1~3위는 수원시, 화성시, 기장군으로 나타났다(2014년 화성시, 수원시, 기장군 순). 수원시의 경우 녹지율, 문화 기반시설 수 증가 등 삶의 여유공간 부분 확충과, 학교, 의료,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 수준을 소폭 증가시킨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 구미시의 경우가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컸는데('14년 9위→ '16년 4위), 주된 상승 요인은 공원면적, 녹지율, 체육시설 수 등의 증가로 삶의 여유공간 부분이 확충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보육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증가하고 사업체수가 증가하여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였다.
- 이처럼 최상위 지역들은 이제 기초적인 생활 여건 등이 완비되어 있어 지역 간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최상위 시·군 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공간 확충 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위 50위 내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 등 광역시 내 군들과 영암군, 칠곡군, 완주군, 진천군, 음성군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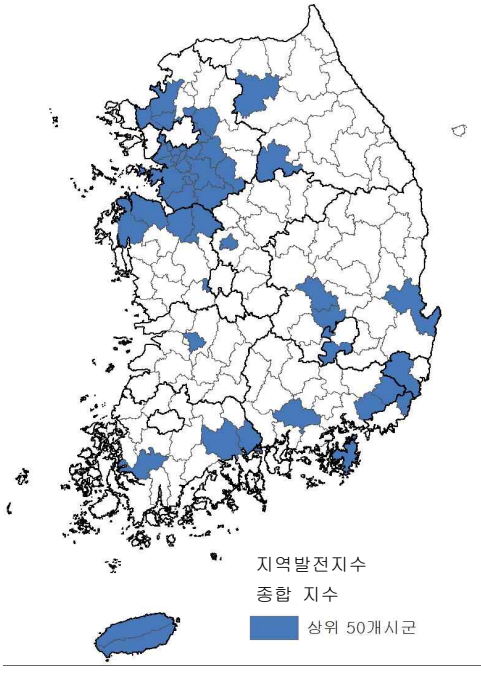
-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은 속해 있는 광역시의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권 확장으로 다른 군 지역에 비해 발전 수준이 높은 듯하다.

○ 일반시에서 지역발전 상위 50위 시군이 감소한 반면 군 지역에서 50위 권 밖에서 완주군, 진천군, 음성군이 새로 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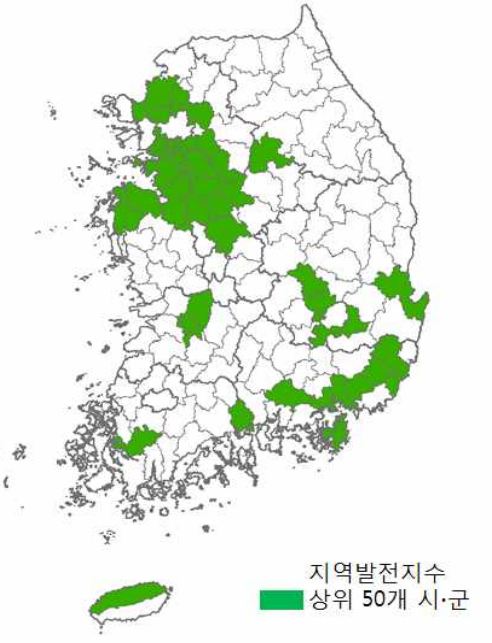
- 이 지역들은 모두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들로 상하수도 보급률 등 기초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보건·복지 여건이 좋아졌다. 또한 사업체와 일자리 등이 증가하여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음성군 제외)가 상승하였다.
- 더불어 완주군, 진천군의 경우는 문화기반시설 수 등이 증가하여 삶의 여유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젊은 가구의 유입으로 인해 조출생률이 증가하여 주민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 군 지역은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삶의 여유공간 지수'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삶의 여유공간 지수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지수에 비해 낮아 종합 지수의 상위권에는 거의 포함되지 못하였다.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 시·군 변화(2014-2016)>



<2014년 상위 50개 시·군>



<2016년 지역발전지수 상위 50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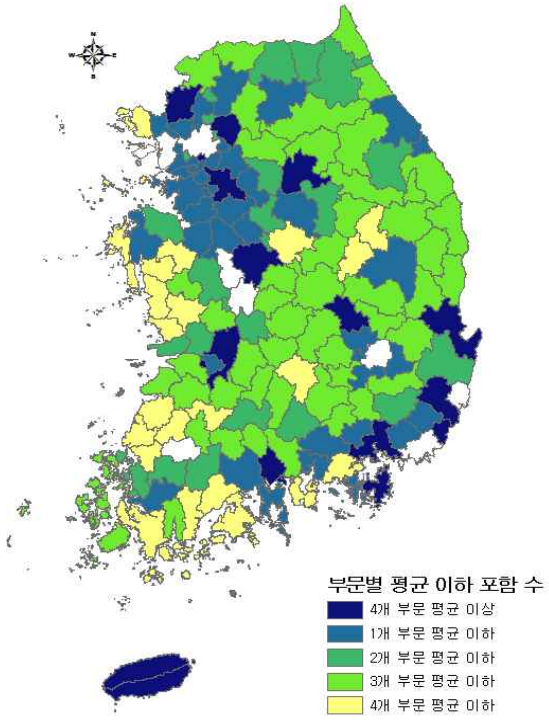
○ 수도권 및 대도시 근교의 시·군들이 4개 영역 모두 평균 지수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 4개 영역 모두 평균 이상 값을 보이는 시·군은 과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원주시, 청주시, 완주군, 광양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거제시, 제주시, 서귀포시이다. 반면 4개 부분 모두 평균 이하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괴산군을 비롯하여 총 25개 시·군이다.

○ 주로 일반시 지역은 1개 정도 영역에서 평균 이하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삶의 여유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 1개 정도 영역에서 평균 이하인 시·군 중 포천시, 서산시, 진천군 등은 생활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종합적인 지역발전 수준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충주시, 순천시,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는 지역경쟁력이 타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지수 이하 달성 시·군 분포>



○ 지역발전 종합지수가 10계단 이상 상승한 시·군은 24개이다.

- 행정구역 유형별로 보면, 일반시는 없고 도농복합시 2개, 군 지역 22개이다.

  * 2014년 RDI 10계단 이상 상승 유형: 일반시 1개, 도농복합시 4개, 군 21개.

- 전체적으로 농촌 지자체들의 순위 상승이 압도적이다. 이 중 50위권에는 군 지역이 3개, 도농복합시가 2개 포함되었다. 상승폭이 컸던 시·군은 중하위권에서 순위 변동이 이루어졌다.

○ 순위 상승 시·군 집계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종합지수 순위 상승 폭이 큰 시·군을 시·도별로 집계해 보면 경북이 6개, 경기와 강원이 4개, 충북과 경남이 3개였다.

  * 지난 14년과 비교해 보면 12년 대비 순위 10위 이상 올라간 시·군 수에서는 전남이 7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강원, 충북이 각각 2개씩이었다.

- 이번 집계에서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4년 종합지수 변화 값에서도 10위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발전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자체는 김포시, 정선군, 청양군, 영암군, 청송군, 울진군 등 6개이다.

<지역발전 종합지수 순위 상승 시·군>

구분	개수	10~19위 상승	20~29위 상승	30위 이상 상승
경기	4	옹진군, **김포시**, 양주시, 가평군		
강원	4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3	금산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1	**청양군**		
전북	2	진안군		완주군
전남	1	**영암군**		
경북	6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울진군**	고령군	
경남	3	산청군	의령군, 함안군	
계	24	18	5	1

주: 밑줄 친 지역은 2012-2014년에도 10위 이상 상승한 시·군을 뜻함.

2.4.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 개요

○ ’15. 7. 21. 국책연구원과 시도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15~’19) 동안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 중이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연구
- 부문별 삶의 질 정책 우수 사례 발굴 및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등 발굴
- 삶의 질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참여
- 기타 삶의 질 정책 자문 및 성과 확산 참여

○ 이 중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연구는 각 국책연구원이 전문성을 지닌 분야별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하였다.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정한 국가기준인 7대 부분, 즉 ① 보건·복지, ② 교육여건,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생활안전) 별로 연구주제를 설정했다.
- 연구주제별로 농어촌의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 및 현장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제시한다.
- 정책 추진 실태의 분석 대상은 삶의 질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세부사업을 참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 정책 형성 및 수행 과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통계 자료와 주민 만족도, 사례연구 등을 통해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 심층연구의 결론으로서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기관별 심층연구 내역(2016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제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충북연구원	원광희	농어촌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복태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김승종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도입 방안

❖ 주요 추진 내용

□ 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 (배경)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맞춤형 급여는 기존에 통합되어 제공되던 급여를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의 네 가지 급여로 분리하여 수급가구 및 수급자 특성에 맞게 제공한다.
- 맞춤형 급여 개편이 농어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내용) 맞춤형 급여 개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맞춤형 급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편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맞춤형 급여의 수급 상황에 대한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해 보면,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수급률이 높지만, 소득 및 주거빈곤율을 기준으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사각지대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농촌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 사각지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도시에 비해 급여 만족도도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맞춤형 급여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된다.

○ (정책 제안)

- 1.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강화

1) 농업부채에 대한 이자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증진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의 완화: ①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 항목을 제외, ② 농촌에 주소를 둔 자동차 중 2000CC 이하로 (예시)차령 5년 이상[1]인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

– 2. 농어촌 주민 대상의 맞춤형 급여제도 강화

1) 농촌 자가 보유자를 위한 주거급여 현금지원 제도 확대

2) 농어촌형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① 농어촌 자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② 농어촌 자가 및 전월세를 제외한 기타가구(무상, 사용대차 등) 형태에 대한 지원

3) 농어촌 초중고교 교육급여의 현실화: ①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에 의한 교육비 지출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교육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② 농촌거주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급여 내 교통비 항목을 간접적 교육비로 간주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법도 모색

4) 저소득 및 과다 채무 농촌 주민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혹은 사각지대 빈곤층 가구의 (금융 혹은 농·어업)부채에 대해 채무가구가 상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분의 부채 탕감, ② 과다 채무가구의 부채가 전액 상환되는 경우, 상환시점에서부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3. 농어촌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구축

1) 농어촌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로 주민 복지수요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강화: ①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적극 활용, ②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연계활용방안 모색, ③ 지역기반의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사회·기업 간 협력적 대응에 입각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 4. 기타 사각지대 해소 방안

1) 농어촌 아동수당 혹은 양육수당 도입: ① 농어촌 미래세대(17세 미만)에 대한

1)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는 차령과 관련하여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기반이 좋은 도시에서만 운행하는 차량과 교통기반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운행하는 농촌차령 간의 인프라 간 차이를 고려할 때 농촌 지역에서는 차령 5년 이하의 조건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아동수당 도입 검토, ② 현금성 급여 혹은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복지서비스 이용활성화 도모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식품부 자체 사업 확대: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차상위계층 혹은 교육급여 대상가구 수준)를 대상으로 자가가구의 주거관리비를 현물로 지급, ② 비수급빈곤층, 농어촌 취약계층(중증장애인, 한부모, 조손가구 등) 초중고교 학생을 둔 가정 대상으로 현물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③ 농어촌 주민 자살예방,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어촌형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④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특성과 지원방안 관련 실태파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 설치

□ 농어촌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 (배경)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운행 효율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과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 교통 복지와 관련한 운영 체계 개편, 운영 모델(수단)발굴, 추진 주체 통합화 등의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교통취약계층(transportation poor)의 교통권을 보장하도록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버스 운영방식의 전환과 더불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범주에 속하는 통학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민간교통수단을 공적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내용) 교육청이 통·폐합학교, 농산촌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행 중인 통학버스 운영사업을 소개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 국내 충북 옥천 안남면 배바우도서관의 마을순환버스 사례와 더불어, 일본과 영국의 농촌 지역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 (정책 제안)

- 1. 농어촌 버스 공급 주체 일원화: 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주관부서 지정, ②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DRT사업 추진
- 2. 예산지원근거 마련: 광역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촌 교통 복지 모델 사업

을 중앙정부 정책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

- 3. 한국형 농촌 교통 복지 모델 발굴: DRT의 개념, 유형, 운영 방식, 예산 지원 체계, 성과 분석,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지자체별, 전문가별 다양한 유형을 정립하고 한국형 농촌 교통 복지 모델을 발굴
- 4. 농촌 중심지의 특성에 따라 농어촌 버스의 운영방식을 경제기반형, 교육복지기반형, 대중교통지원형 등으로 다양화: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강화
- 5.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제도화 방안 마련: 교육청 운영 통학버스를 비롯하여, 민간 마을버스 사업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

□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 (배경) 농업의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활용하기 위해 전문인력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최근 농업이 과거 1차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이농현상으로 젊고 생산력 높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과 전문인력화를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 (주요 내용)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활용 실태를 검토하고 전문인력화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 연구문헌 및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과 정책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 결혼이민여성의 지위 향상 및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한국어 교육, 사회활동 교육, 일자리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직업이동 경로

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직 진입에는 한국어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사회적 관계형성 부문에 있어서는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결혼이민여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 한국어 자격증, 전문인력화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전문인력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

○ (정책 제안)

- 1. 지원체계: ① 지역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 2. 사회적 관계: ①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확장, ②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강화
- 3. 교육분야: ① 전문인력화 대상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 ② 결혼이민여성 전문 농업경영주 양성, ③ 결혼이민여성 예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확대, ④ 경제활동준비 교육, ⑤ 6차산업 관련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확대, ⑥ 1:1맞춤 교육 개선
- 4.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발굴: ① 지역사회 사회통합형 일자리 발굴, ② 지역사회 맞춤형/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③ 결혼이민여성 관심형 일자리 발굴

□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도입 방안

○ (배경)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서 제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1.7%(2015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주택과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촌의 주거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농어촌 주거실태 및 도시·농어촌 간 주거서비스의 격차를 파악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한계를 도출하여 농어촌 여건에 맞는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내용) 농어촌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및 법령과 제도, 정책을 검토하고, '주거실태조사'(2014년)를 토대로 농어촌지역의 가구특성 및 도시·농어촌 간 주거서비스 격차를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 수준을 진단했다.

- 농어촌에서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 중 주거면적과 방수 항목에서 도시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 양호하게 평가된다.
- 농어촌은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설비항목은 도시 지역에

비해 취약하고, 주택의 구조물, 방수, 난방, 환기, 재난 및 재해 안전성 등의 주거 환경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 농어촌의 노후주택과 공·폐가가 증가하여 주거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 서비스 기준 중 주택 부문은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을 직접 적용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
- 농어촌 지역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거 면적이나 방수 등의 기준보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제안) 농어촌 최저주거기준의 제도화를 위해, 현행 농어촌 서비스 기준 중 주택 부문을 대체한 '농어촌 주거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현행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이나 주거실태조사와 별개로 농어촌 주거실태조사 및 '농어촌지역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1. '농어촌 주거서비스 기준'의 도입: 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② 건축구조, 건축년도, 난방시설 등 통계화 가능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통한 세부 지표 개발
- 2. '농어촌지역 최저주거기준'의 신설: ① 「주거기본법」 개정, ② 「농어촌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③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3. 농어촌 주거서비스에 대한 이행평가체계 개선: ①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되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 대상가구를 확대, ② 시·도 단위의 평가방안 마련
- 4. 중장기 방향: ① 농어촌 가구·주거 특성이 반영된 지표 개발, ② 농어촌 주거실태조사 활용방안, ③ 농어촌 지역개발 및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3. 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

3.1.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발간

3.2.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3.1.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발간

❖ 개요

○ 농어촌 삶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이슈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삶의 질 정책 방향 및 연구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슈리포트를 발간한다.

-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 사항을 도출한다.

○ 또한 정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 주체(삶의 질 현장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삶의 질 정책 개선 및 발굴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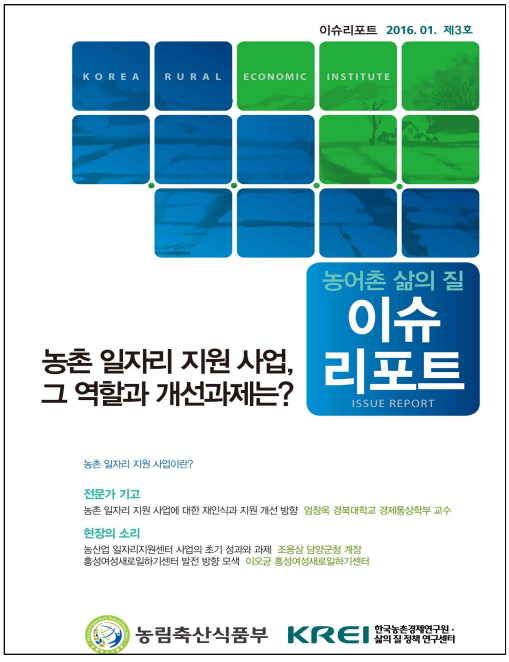
○ 이슈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공동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자와 심층 연구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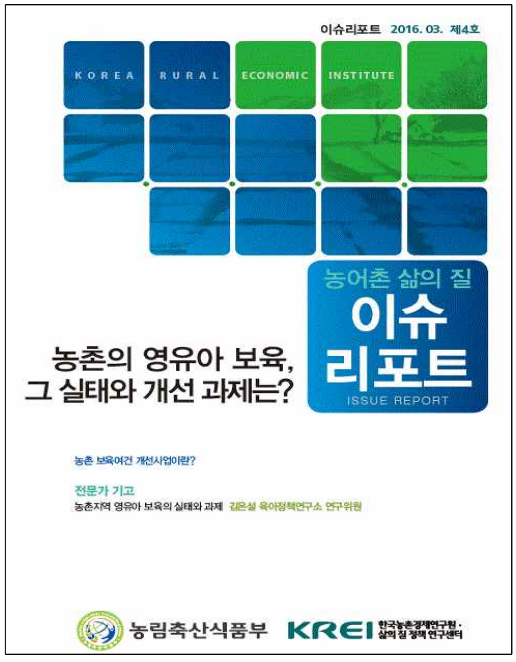
○ 발간한 이슈리포트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시·군 삶의 질 담당부서 혹은 기획실, 삶의 질 정책지원 연구네트워크(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삶의 질 현장자문단,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KREI 통신원과 리포터 등에게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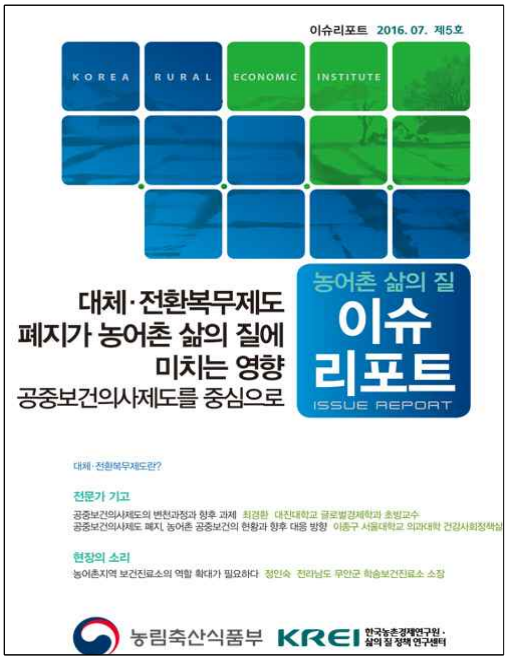
○ 2015년 7월 1호를 시작으로 통권 6호까지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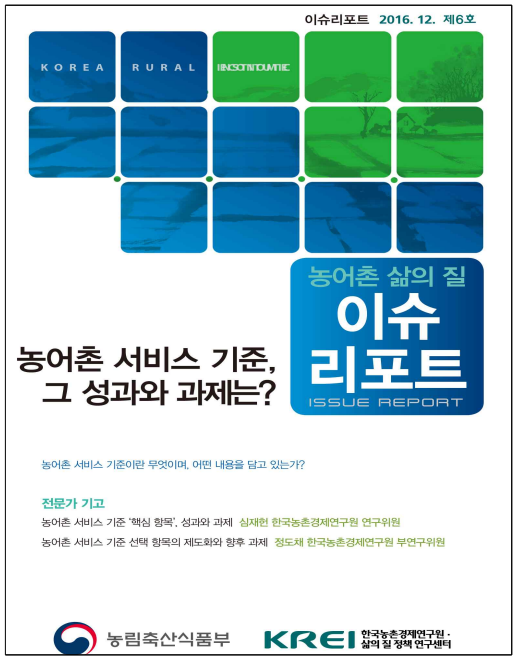
- 이슈리포트 1호는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5.09).
- 이슈리포트 2호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5.11).
- 이슈리포트 3호는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6.01).
- 이슈리포트 4호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그 효과와 향후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1편의 글을 실었다(2016.03).
- 이슈리포트 5호는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6.07).

– 이슈리포트 6호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2편의 글을 실었다(2016.12).









❖ 주요 추진 내용

□ 이슈리포트 3호 (일자리)

○ (제목)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 (구성) 이슈 관련 자료: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 전문가 기고: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 개선 방향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현장의 소리: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의 초기 성과와 과제
  (조용상 담양군청 계장)
- 현장의 소리: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발전 방향 모색
  (이오균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이슈) 이슈리포트 제3호에서는 농촌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차별화된 경제적·지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 역시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정책성과를 얻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센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지역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사업은 지역 간 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업·농촌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대부분의 사업은 도·농 연계형으로 운영되며 담양·곡성·구례와 같이 농촌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농산업 부문의 일자리 순환 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 이러한 사업이 농업·농촌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내용)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가 기고 한 편과 현장의 소리 두 편 등 총 세 편의 글을 실었다.

-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 개선 방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의 초기 성과와 과제”에서는 담양군의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그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발전 방향 모색”에서는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슈리포트 4호 (영유아보육)

○ (제목)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그 효과와 향후 과제는?
○ (구성) 이슈 관련 자료: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란?
– 전문가 기고: 농촌 지역 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과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슈) 이슈리포트 제4호에서는 농촌 영유아 보육 문제를 다루었다.
–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영유아 수 감소로 이어졌고, 농촌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복지정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주말 아이돌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모성 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보육여건 개선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 하지만 여전히 농촌의 다문화 가정 및 조손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다양화, 시설 접근성의 문제,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등 농촌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농촌의 영유아 보육 환경의 개선은 앞으로 농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 (내용)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글 한 편과 농어촌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 기고 한 편을 실었다.
–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 “농촌 지역 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과제”에서는 당면해 있는 농촌 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슈리포트 5호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

○ (제목)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 (구성) 이슈 관련 자료: 대체·전환복무제도란?

– 전문가 기고: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최경환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초빙교수)

– 전문가 기고: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 농어촌 공중보건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 현장의 소리: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정인숙 전라남도 무안군 학송보건진료소 소장)

○ (이슈) 이슈리포트 제5호에서는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 문제를 다루었다.

– 2016년 기준으로 한해 평균 2만 8,000여 명이 대체복무(10,500명)나 전환복무(16,700명)로 병역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6년 5월 17일 폐지 계획을 내놓았으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가 2023년에 이르러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하였다.

– 계획이 추진될 시 대체복무제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 공백을 유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농어촌지역 내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의료기회를 감소시키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농어촌 삶의 질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내용)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에 대한 전문가 기고 두 편과 현장의 소리 한 편 등 총 세 편의 글을 실었다.

–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에서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도시·농촌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이 심화되는 문제와 공중보건의사 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부분을 논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 농어촌 공중보건의 현황과 대응 방향"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를 꼬집으며,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 공급 방식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의 부활, 농어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국립대학병원의 연계 등 새로운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과 보건진료소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이슈리포트 6호 (농어촌 서비스 기준)

○ (제목)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

○ (구성) 이슈 관련 자료: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전문가 기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성과와 과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문가 기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슈) 이슈리포트 제6호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 2011년 1월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를 시행하였다. 삶의 질 향상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항목을 설정하였고,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기준으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는 핵심 항목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은 공식 통계, 협조 자료, 행정조사 자료를 집계·분석하

여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이러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혹은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내용)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전문가 기고 두 편의 글을 실었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성과와 과제"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필요성을 논하고 핵심 항목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제시하였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내용을 담은 삶의 질 정책 부문별 농어촌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간접적인 성과를 유추해 보았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에서는 지역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도입 배경, 선정 및 제도화 추진 경과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에서 선택 항목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 및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하였다.

3.2.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배경) '15년에 처음 발간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홍보하고, 농어촌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 '16년의 우수사례집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고유한 삶의 질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의 상향식·협력적 활동에 기반을 둔 삶의 질 우수사례를 발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 (대상 정책) 농촌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활동가, 농민,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했다.

-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홍보 방안) '16년 12월 개최된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활용하여 농어촌 삶의 질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 주요 추진 내용

□ 양평 달리는 행복 돌봄 이웃들: 이웃이 불편하면 복지가 찾아와요

○ (배경과 계기) 양평군은 2015년, 행복돌봄과 내에 무한돌봄센터를 전담조직으로 두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봉사동아리 및 개인 재능기부자 등을 조직하여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보건복지, 생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사업을 시작했다.

○ (주요사업)

- 복지 분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인등록안내 및 서비스 상담
- 건강 분야: 수지침, 건강 체크 및 교육,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 노인 종합상

담, 우울증 선별검사 및 상담

- 위생 분야: 빨래, 이·미용 서비스, 청소 서비스 제공
- 주거 개선: 보일러, 가스,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전등 교체, 창호, 문고리 등 주택 보수서비스 제공

○ (시사점)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면서 농촌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 귀촌인을 대상으로 마사지 서비스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하는 등 귀촌인들에게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기회를 마련했다.

□ 제천 농촌공동체연구소: 농촌공동체의 다양한 실험, 마을살이를 바꾸다

○ (배경과 계기) 제천간디학교를 통해 인연을 맺고 교류해 온 귀농·귀촌인이 중심이 되어, 화폐경제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 (주요사업) '누리마을 빵카페'을 운영하면서, 이주여성의 소득 창출을 돕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빵 생산과 지역 농산물 판매,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시사점) 귀농·귀촌인이 중심이 되어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기회 확대 등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 강진 옴냇골 산촌유학협동조합: 마을이 키우는 옴천면 아이들

○ (배경과 계기) 마을의 옴천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되자 '힐링산촌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살리기운동에 나섰다.

○ (주요사업) '힐링산촌체험' 수업을 통해 텃밭 가꾸기, 모내기·벼 수확 등 농사 체험, 힐링산촌 자연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함. '문화·예술 감성교육' 수업으로 승마·스키 등의 문화·생태 체험과 예술 동아리 활동, 1인 2악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시사점) 학교교사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산촌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가족 중심의 귀촌인이 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 양평 서종마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동행하게 되었네

○ (배경과 계기) 수려한 자연환경에 비해 정주공간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서종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환경 개선 활동을 시작했다.

○ (주요사업) 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종마을 디자인운동본부를 창립하고, '한뼘공원' 조성 및 '북한강 갤러리' 리모델링 사업 등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 (시사점) 마을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마을청년의 후진양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서귀포 제주살래 협동조합: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동행하는 행복한 마을살이

○ (배경과 계기) 제주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과 현지 주민이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협력하고자 했다.

○ (주요사업) 제주살래 협동조합을 통해 '사랑의 감귤 공급 사업' 등 경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우리마을 꾸러미 사업', '작은결혼식',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집수리 사업', '마을 청춘극장' 등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시사점) 제주살래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의 성과를 제주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소농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배경과 계기) 완주군 소농의 사회적 정착과 대량 단작 위주의 농업환경 개선, 지역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로컬푸드 사업을 전개했다.

○ (주요사업)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완주군 소농의 소규모 농업생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직매장을 운영하고, 반찬류와 제과제빵, 가공식품 등 식품가공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다.

○ (시사점) 생산자 조직화와 '얼굴 있는 농산물 만들기'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로컬푸드 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 지역의 소농들이 안정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작물을 납품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 자율성을 키워온 농민 생산자와 지역의 먹거리 가치를 알고 찾아온 소비자 간 관계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거창 하성 단노을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문화생활거점 만들기

○ (배경과 계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이모작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에 방치된 폐교를 살리고, 노인 대상의 글짓기 교육 및 백일장 개최 등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주요사업)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이모작 사업을 활용하여 주민 백일장을 개최하면서 "하성 초등학교 살리기 주민모임"이 결성되고, 2014년에는 폐교에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를 설립했다.

○ (시사점) 센터가 어린이를 포함하는 젊은 가족들의 생활과 육아,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면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 홍성 반교마을: 문화가 마을에 이야기를 더하다

○ (배경과 계기) 충남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용하여, 노인 대상의 그림과 목공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도했다.

○ (주요사업) 미술 및 목공 교육을 수료한 노인들이 동아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문패겸 우체통 만들기, 마을벽화그리기 등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시사점) 노인들이 미술 및 목공 동아리활동을 통해 심리치유와 마을환경 개선에 성과를 내었다.

□ 진안고원길: 첩첩산중 바람과 구름이 쉬었다 가는 곳

○ (배경과 계기) 진안 곳곳에 산재하고 감추어진 여러 마을의 문화와 역사,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 소통과 교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실길 복원활동을 시작했다.

○ (주요사업) 진안군 곳곳에 산재한 마실길을 총 14개 구간, 총 210km를 복원, 재정비하여 진안고원길로 조성하였다.

○ (시사점) 진안군 지역사회가 진안고원의 여러 답사길을 관리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자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서귀포 하례리 생태관광마을 협의체: 마을과 자연의 상생발전, 공동체가 모색하다

○ (배경과 계기) 하례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생태·문화자산 보존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주요사업) 마을주민들이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를 조직하고, 기존 마을조직을 활용하여 마을생태관광을 시도하고 있다.

- 효돈천 생명스토리텔링 활동, 황칠나무와 소귀나무를 활용한 소득사업 모색, 향토음식 개발(감귤버거, 감귤까나페, 소귀나무열매음료 등), 효돈천 하천트레킹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시사점) 하례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태관광 협의체를 조직하여 생태관광사업을 수행하고, 생태와 사회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발전방식을 탐색하고 있다.

4. 정책 토론회, 컨퍼런스 개최 등

4.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4.2. OECD 국제회의 참석

4.3. 해외 사례 조사

4.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23일 (금) 13:30~18:00

○ 장소: 정부세종 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및 소연회장

○ 주제: 제3차 삶의 질 계획 부문별 성과·한계 및 정책 과제

○ 발표 내용

1)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

2) 농촌의 교육 주체로서 지역 주민의 역할과 가능성

3)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마을에서 살아갈 아이들

4) 삶의 질 계획 심층연구 보건·복지, 문화,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결과 발표

○ 참석 인원: 150명

❖ 주요 내용

○ 전문가, 현장 활동가, 지역 리더를 초청하여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2년차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였다.

○ 각 부문별(보건·복지, 문화,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심층연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을 진행하였다.

□ 주요 토론 내용

○ 삶의 질 정책이나 서비스 기준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혜택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그 후에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 농촌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전국 단위로 확산할 때 역효과가 존재한다.

- 똑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의 특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마을과 지역의 실정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 우수사례를 발표할 때 어떤 배경에서 사례가 출발되었는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고민을 잘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었고,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았고, 어떻게 자금이 형성되었는지 등의 과정을 자세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삶의 질 향상'이 목표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농촌을 낙후되어 있고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 바탕을 둠을 시사한다.

-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벤치마킹 대상이고, 도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지만, 농촌의 삶과 도시의 삶은 다르다. 도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의 기준과 양식을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큰 기여가 될 것이다.

○ 농촌공간에 대한 정책이 지금까지는 개발과 시설지원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농촌의 융복합공간화, 농촌 디자인공간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 인구구조, 4차혁명, 기후변화 등의 메가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촌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하고 있다.

□ 분야별 토론 내용

<복지·문화 부문>

○ 도서지역에는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많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원으로 도서지역에 진료시설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의료 영역을 공공에서 다 책임지는 것보다는 민간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고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은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계적 기준으로 선정하고, 면사무소 복지전담 공무원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수급자가 수당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움을 겪는다.

○ 주민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대다수는 70~80대이며, 농민들은 바빠서 참여할 수가 없다.

- 컨설팅 업체와 담당 행정에서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 주민 교육이 주로 여름에 진행 되는데, 농촌 주민들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

○ 농촌과 도시 간에 문화 기반 차이가 있다.

-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프라부터 소외지역 지원, 능동적 참여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도시와 농촌의 결혼이민여성의 실태 차이가 있는데 출신국의 차이가 가장 크다.

- 농촌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농촌에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체로 출신국의 소득이 낮다. 또 농촌 생활을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상황이 더 나은 우리나라 농촌에서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여성들을 전문인력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 결혼 이민여성을 돌봄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들을 미래 농촌사

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 농촌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최근 청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연령별 농촌일자리 및 노동시장의 활동을 구분해줬으면 한다.

- 청년 취업지원을 활성화해서 농촌에 젊은 인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 일본의 경우 청년들이 농촌에서 활동 및 창업을 하면 얼마동안은 힘들기 때문에 3~5년 동안 생계형 수당을 준다. 우리나라도 시행하려다 정책적 이유로 취소되고 시설 투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생계형 수당을 다음에라도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농업·농촌의 취업자는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해서 영농이 압박을 받고 있다. 농업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여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다.

- 농부 임금이 농번기와 농한기 사이의 진폭이 너무 크고, 계절적 수요의 시장기능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 사설 인력중개소라든지 농협의 인력센터가 있지만 운영상의 모순이 있고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이 부분을 현장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구분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께 보는 것도 좋다. 겸업이 중요한 요소이고 실제로 겸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생활기반 부문>

○ 국가최소기준으로서 농어촌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으며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농어촌 주거 문제를 주택 자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계층별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 동안에는 주택법에 들어가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농어촌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의되어 왔다. 농어촌과 관련해서는 면적, 방수 부분이 아닌 구조, 시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주택 자체뿐 아니라 주거지의 안전, 편리, 쾌적의 세 가지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로 시·군단위에서 주거지역이 재해, 산사태 등에 얼마나 안전한지

파악해야 한다. 주택 단위는 건축연도에 따라 판단하되 노후도와 시설현황도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 주거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 문제다.

-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 이 사업은 주택만 해당되고 창고나 기타 부속 건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간과되는 부분은 농지 옆의 창고나 축사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 문제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택 부분에만 신경 쓰고 있다.

○ 교통문제는 단순하게 교통오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같이 바라봐야 한다.

□ 행사 사진

4.2. OECD 국제회의 참석

❖ 개요

○ (회의 목적) OECD 제3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및 제19차 농촌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였다.

- OECD 제3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19차 농촌작업반 회의((19th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Rural Policy)에 참석하여, 최근 OECD 국가 농촌정책의 아젠다와 선진국 정책수립사례 등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농촌개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했다.
- 최근 농촌개발정책의 세계적 이슈이자 한국도 당면한 과제인 인구희박지역 정책 수립방안, 농촌 지역의 혁신과제,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식량안전과 농촌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의 지역개발과 농촌개발 정책 간 연계,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선진국 등 해외국가의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OECD RDPC와 농촌작업반 회의에서 내용과 설정된 의제에 대해 농림부와 협업하여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 주요 내용

□ 농촌의 혁신과 기업가주의

○ 농촌 지역의 생산성 여부는 도시민의 접근성 확보 및 (도농 간) 교류활동 증진 등 농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 농촌 지역의 혁신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간영역에서 통상가능 부문(tradable sector) 및 통상불가능 부문(non-tradable sector) 간 연계 활성화
- 둘째, 생활환경과 서비스 접근성, 재정투자 등 부문정책 간 연계를 가능케 하는 다 부문 간 접근방식(multi-sectoral approach) 확립 제안

▫ Rural Policy 3.0

○ 2006년 New Rural Paradigm이 선언된 이후, 2010년대 OECD에서 새로 제시한 농촌정책틀인 Rural Policy 3.0의 개요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주요 정책수단을 소개하였다.

○ Rural Policy 3.0의 주요 목표: 농촌 지역의 사회와 경제, 환경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의 경쟁력과 생산성의 향상을 시도한다.

○ Rural Policy 3.0의 접근방식: 농촌 커뮤니티의 경쟁력 향상, (다 부문 간) 통합적 투자방식으로의 개편, 다양한 농촌 지역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 농촌 커뮤니티 지원: 농촌 커뮤니티의 현재 역량과 입지조건, 인적자본, 자원, 장소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
- 공공정책의 투자방식: 보조금에 입각한 지원방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지역의 필요에 적합한 통합적인 재정 투자 및 공공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원방식 확대
- 지역수준에서 지방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농촌 지역의 서비스전달 및 경제개발, 지역발전 아이디어의 공유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1) 농촌과 농촌, 2) 농촌과 도시, 3) 행정과 영리/비영리경제 주체 간 파트너쉽을 형성
- 지역 수준에서 참여 증진 및 상향식 발전을 증진하는 파트너쉽 중요성 강조

▫ Cork 2.0 선언: 농촌 지역의 더 나은 삶

○ 2016년 9월, 아일랜드 Cork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ork 선언 2.0은 EU 농촌정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Cork 선언 2.0의 기본 얼개는 EU의 농촌발전에 통합적(integrated), 다 부문적(multi-sectoral), 영역적(territorial), 장소-기반(place-based)의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Cork 선언 2.0의 목표는 농업에 기반을 두면서도 농업 이후를 바라보면서, 농촌 지역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지역적 주도성 강조, 궁극적으로 EU 공동농업정책(CAP)의 한 축인 농촌발전정책의 확립으로 설정되었다.

○ Cork 선언 2.0의 주요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농촌 번영 촉진
② 농촌 가치사슬 강화
③ 농촌의 실현가능성과 활성화 투자
④ 농촌환경 보전
⑤ 자연자원 관리
⑥ 기후(변화) 실천 촉진
⑦ 지식과 혁신 장려
⑧ 농촌거버넌스 강화
⑨ 정책 전달과 간소화 촉진
⑩ 실행력과 책임성 증대

○ 정책적 제언

① 농촌 지역과 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공공 인식 개선
② 농촌 커뮤니티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
③ 목적중심적이고 간결하며 유연한 접근방식에 의한 농업 및 농촌 정책 수립
④ 농촌과 관련된 거시 및 부문 정책에 대한 체계적 검토
⑤ Cork 선언 2.0의 10대 권고사항이 반영된 미래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의 비전과 가치 확립을 제시

□ 일본의 인구변화 및 농촌 지역 정책

○ 일본 정부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여 경제재생(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14년에 종합정책인 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했다.

– 이 전략은 어린이 육성, 작은 거점 형성, 지역 코디네이션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 일본정부는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2015년, 신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했다.

– 「콤펙트-네트워크」 의 기본 (공간정책) 기능은 농촌중심지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혁신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의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 신국토형성계획은 농업 및 농촌 정책 간 융합적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 사업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농촌 주체들에 대한 참여기회 증진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여러 당사자 간 합의 형성과 다양한 활동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농촌개발은 직불제, 6차산업화, 농촌-도시 교류 프로그램 등 여러 유형이 있다.

- 첫째, 다면적 기능 직불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보전하기 하기 위한 기초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불금을 개별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촌 커뮤니티 단위로 지원하고자 하며, 농촌 환경보전활동이나 지역 주민 간 사회자본 증진을 이비지하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둘째, 농촌의 수입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6차산업화로서, 가치사슬을 형성하기 위해 농가와 지역기업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 셋째, 농촌-도시 교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최근, 일본의 농촌개발정책은 외국 관광객 증가로 건강 케어, 농업 등을 융합한 국가 관광정책을 추진 중이다.

-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린투어리즘 등 일본 농촌 체험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농촌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늘리고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에 늘고 있는 유서 깊은 전통주택을 재활용하여, 매력적인 숙박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농촌의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자원을 융합시킬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4.3. 해외 사례 조사

❖ 개요

○ 조사 목적

-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해외선진사례를 조사하여 농촌 지역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일본의 농가민박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과소화·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본의 다양한 6차산업화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국내 6차산업화의 품질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모색하였다.

○ 조사 개요

- 조사 국가: 일본
- 조사 기간: 2016년 12월 9일 (금) ~ 12월 13일 (화), 4박 5일
- 조사 내용

1) 주민주도 농촌관광 선진사례 견학

① 아나미즈쵸 지역의 농가민박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주민 워크숍 참관

② 아나미즈쵸 농가민박 체험 및 대표 면담

③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촌 방문 및 대표 면담

2) 6차산업화 우수 사례 견학

① 효고현 고베시 시립 롯코산 목장 방문 및 대표 면담

② 우지시 맛차 전문 나카무라 토키치 본점 방문 및 대표 면담

③ 교토시 월계관 양조장 방문 및 대표 면담

❖ 주요 내용

○ 아나미즈쵸 농가민박

- 아나미즈쵸는 과소화·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촌 비즈니스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민박 육성을 통한 농촌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아나미

즈쵸는 인근 지자체인 노토쵸에서 '슌랑(春蘭)의 마을'이라는 브랜드로 40호 농가민박이 연계하여 초중학교 수학여행 학생 및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아나미즈쵸의 여러 마을에 농가민박을 양성하고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가민박 운영 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 현재 아나미즈쵸의 5개 마을이 연계하여 농가민박을 양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 만들기 현장 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토대학교의 호시노 사토시 교수가 2016년 4월부터 마을 주민들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계획수립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촌

- 시라카와촌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가옥과 생활 풍습으로 유명한 곳으로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주민 주도로 전통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주민 조직을 결성하여, 지역 경관 보존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전통 가옥 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고베시 시립 롯코산 목장

- 고베시 근교에 위치한 목장으로 40만평 규모 부지에 조성한 축산 및 유가공품 관련 체험 목장이다. 1950년대부터 목장을 조성하였으며 1956년에 소 2마리와 양 3마리로 방목을 시작한 이래로 규모가 확장되었고 1976년에 외부에 목장을 개방하였다. 1987년부터 치즈를 비롯한 각종 유가공품을 가공 판매하고 있으며, 체험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 목장이라는 콘텐츠 하나로 생산·가공·유통·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엮어낸 6차산업화 우수 사례로 판로 개척 및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6차산업화 농가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교토시 월계관 양조장

- 일본술 양조 회사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과거에 양조장이 번성했던 교토시 후시미구 오쿠라마을에 양조과정 체험관을 조성하였다. 회사의 역사와 청주의 양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으며 견학 후에는 월계관에서 생산하는 일본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다.
- 양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비료나 사료로 이용하는 순환 농업에 참여하

며, 지역 초등학교에서 환경 수업을 실시하고 식용이 불가능한 식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 이미 일본 청주 부문에서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6차산업화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해외 판로 개척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 우지시 맛차 전문 나카무라 토키치

- 나카무라 토키치는 전통 있는 일본의 녹차 회사로 다양한 녹차 가공 제품을 판매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우지시에 2개, 교토시에 1개 두고 있다. 지속적인 상품 개발 및 사업 콘텐츠 개발로 기업의 전통을 유지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였다.
- 녹차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소바, 정식 메뉴 등 다양한 6차산업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며 개발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카페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새로운 수입 경로를 창출하였다.

5. 네트워킹 및 정책 지원 기반 구축

5.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5.2. 기타 삶의 질 정책 지원 업무

5.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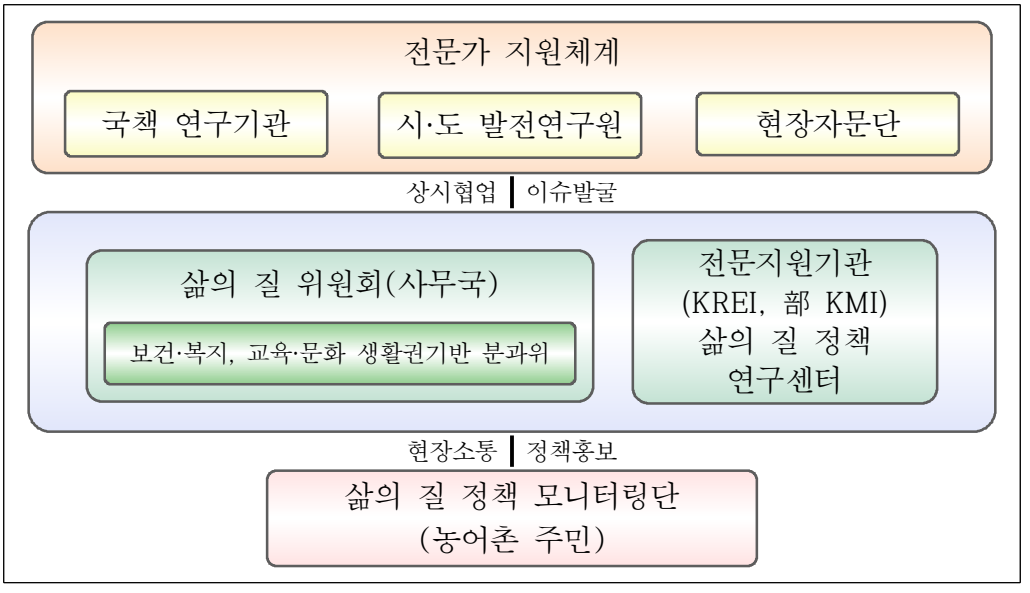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2015년도 협약을 맺고 정책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교사, 사회복지사, 공중보건의사, 구급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농촌 현장의 여론이나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하였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각 일원들 간의 상시 협업과 소통을 통해 농촌이슈를 발굴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7개의 국책연구원, 9개의 시·도연구원,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현장자문단(53명),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단(13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주요 내용

□ 현장자문단 운영

○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배경	- 서비스 전달자 및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정책 수요와 전달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적시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제시 - 현장자문단이란 조직으로 구성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출 범	- 2015년 7월 21일 출범식(서울 양재동 aT 센터) - 정책모니터링단(KREI 리포터)과 함께 현장네트워크를 구성
조직구성	- 삶의 질 7대 정책 부문별 현장전문가로 구성 - 보건복지 분야 14명, 교육 분야 9명, 정주생활기반 4명, 경제활동·일자리 8명, 문화·여가 8명, 환경·경관 4명, 안전 6명
운영시스템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운영
성과 관리	- 연구자문 및 이슈발굴 · 현장자문단 토론회 개최, 정책 부문별 토론 통해 이슈 발굴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대토론회에 의견 제시

○ 현장자문단 토론회

- 일시: 2016년 8월 11일 (목) 14시~17시
-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호텔(다모아홀/루비홀)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회의 주제: 현장에서 바라보는 농어촌 삶의 질

<토론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토론좌장/ 진행자	김정연	충남대
	이기원	한림대
	원광희	충북연구원

구 분		성 명	소 속
주최		김고은	농림축산식품부
		성주인/김용욱/유은영/이정해/정희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 자문단	보건·복지 토론자	정인숙	무안군 학송보건진료소
		김수민	강릉시 보건소
		조영실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교육 토론자	이애희	완주군청 교육지원과
		박현정	홍성초등학교
		임성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박승규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오수홍	언양초등학교
	문화·여가 토론자	현연희	증평군립도서관
		전형섭	금수문화예술마을
	정주생활기반 토론자	오재현	(유) 인제하우징
		정경환	충남귀농귀촌학교
	경제활동·일자리 토론자	심일호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조봉기	안동 큐브엔씨
	환경·경관 토론자	복권승	협동조합 풍
		반기민	농산촌활성화연구소

<정책 부문별 주요 토론내용>

정책 부문	주요 토론내용
보건 복지	❍ 정책 건의사항 - 공공보건 의료기관 운영 고도화 필요: 지자체에서는 지방 보건소를 하나의 산하 기관으로만 생각할 뿐 특수한 전문분야라는 인식이 없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농어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지역연대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기는 하지만, 국가정신건강정책에 농촌 지역의 인력 공급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농촌 지역에서 원활하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음.
교육 부문	❍ 정책 건의사항 - 교육통합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교육 분야를 폭넓게 보고 다양한

정책 부문	주요 토론내용
교육 부문	지원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통합지원센터가 군 단위 혹은 시·군단위로 존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 내에서 하나의 지역아동센터라도 확실히 운영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함.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례 - 충남교육연구소의 '청소년 문화학교 느티나무' / 충청남도의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 완주군의 '마을 선생님 학교 연계 사업' / 공주시의 '우성중학교' / 완주군의 '고산향공동체'
문화 여가	❍ 정책 건의사항 - 도서관의 문화·여가 공간화 지원: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도서관의 기능을 책을 보는 것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확대해야 함. - 농어촌지역 문화 수요 조사: 사람들의 문화 수요 및 욕구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상하고 지원해야 함.
정주 생활 기반	❍ 정책 건의사항 - 탄력적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운영: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운영할 시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촌 빈집 관리 및 운영 다양화: 지자체에서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귀촌인에게 임시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례: 옥천군의 '배바우작은도서관'
경제 활동 일자리	❍ 정책 건의사항 - 고령농가 대체인력 개발: 고령농가에서 향후 농사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청년들이 대리로 농사를 짓고 이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역 핵심사업 개발 및 사업 운영 주체 고도화: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만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님. 마을을 거점화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사업이 필요함. - 6차산업 개인인증 사업자 지원: 6차산업 개인인증 사업체를 홍보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6차산업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네트워크 조직망이 필요함. - 농촌 내 민간역량 강화: 농촌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거나 공무원들의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환경 경관	❍ 정책 건의사항 - 축산 농가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약병 처리에 대한 인식 향상

□ 정책지원 네트워크 공동연구 진행

○ 정책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국책·시도연구원과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연구',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심층연구', '2016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에 대한 업무에서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

<시행계획 점검평가 연구 주제 및 연구기관>

부문	정책군	연구기관
보건·복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강원발전연구원
교육여건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충남연구원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대구경북연구원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제주연구원
문화·여가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전북연구원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환경·경관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심층연구 주제 및 연구기관>

제목	연구기관
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어촌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충북연구원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제정 방안	국토연구원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자체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참여 연구기관>

핵심항목 점검부분	연구기관
2016 강원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강원발전연구원
2016 충청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충북연구원
2016 충청남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충남연구원
2016 전라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전북연구원
2016 경상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대구경북연구원
2016 경상남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경남발전연구원
2016 제주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제주발전연구원

5.2. 기타 삶의 질 정책 지원 업무

❖ 개요

○ 지자체(9개 도)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화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였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국가 최소기준인 핵심항목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선택항목'으로 이원화하였으며, 2016년 지자체의 선택항목 확정, 목표치 설정, 서비스 기준 이행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화 업무를 사무국, 시도연구원과 함께 지원하였다.

○ 삶의 질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였다.

- 삶의 질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분야별 정책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교육·문화, 보건·복지, 생활권기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각 분과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삶의 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과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시행계획 평가 결과 등 정책 분야별 토론·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된다.
- 2016년도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1회씩 개최되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논의 안건 발굴 등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콘텐츠를 보강하였다.

- 농어촌 실태 진단 및 삶의 질 정책 지원을 위한 목적에서 삶의 질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 하였다.
- 홈페이지를 통해 삶의 질 정책 연구 보고서, 토론회 자료, 관련 신문기사 등 삶의 질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 주요 내용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지자체 제도화 지원

○ 2015년 9개 시·도연구원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선택항목들의 지자체 추인과 중기(2019년) 목표치를 확정하였다.

- 사무국과 공동으로 지자체 담당자, 시·도연구원이 참여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하여('16. 11.2),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표준조례(안) 등 제도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 결과 2016년 12월 기준, 9개도에서 총 58개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항목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였으며, 각 선택항목에 대하여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까지의 목표치도 설정하였다.
- 아울러 9개도에서 2017년 추진을 계획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신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자체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항목 확정(목표치 선정)현황>

지역	삶의 질 정책 부문							계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경기	2		2	2	2			8
강원		3	1	1	1			6
충북	1		2	1			1	5
충남	3		1				2	6
전북	2	1	1	1	2		1	8
전남			3				1	4
경북	1	1	1	2	1			6
경남	1	1	2	2	1	1		8
제주		1		4	1		1	7
계	10	7	13	13	8	1	6	58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업무를 지원하였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화 수준(선택항목 확정, 조례 제정 등)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다.
- 2017년 신규 지표 선정과 관련한 행자부 합동평가팀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 삶의 질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생활권기반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생활권기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16년 11월 23일 (수)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 참석: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간사) 외 당연직 위원, 엄서호 교수(경기대) 외 위촉직 위원,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 안건: 분과위원장 선출,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 질 계획 생활권기반 분야 시행계획 이행 현황, 정주생활기반 및 환경·경관 부문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심층연구와 연계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등에 관한 논의 안건을 제안하였다.

○ 교육·문화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 교육·문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16년 11월 28일 (월)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 참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간사) 외 당연직 위원, 최병숙 교수(전북대) 외 위촉직 위원,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 안건: 분과위원장 선출
- 전문지원기관은 교육·문화 관련 15년도 시행계획 평가 결과 및 개선 과제, 교육·문화 부문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논의 안건으로 제공하였다.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16년 12월 16일 (금)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간사) 외 당연직 위원, 김동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위촉직 위원,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 안건: 분과위원장 선출, 국민연금 및 농지연금 제도 개선, 분만 취약지 지원 등 농어촌 복지 관련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

– 전문지원기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15년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논의 안건으로 제공하였으며, 15년도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각 세부 사업별 개선 과제를 논의 안건으로 제안하였다.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홈페이지 운영

○ 삶의 질 관련 통계 자료 업데이트

– 연구를 통해 산출된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지역별, 정책 부문별로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총 10건).

– 농어촌 서비스 기준(28건),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산출(36건)과 관련한 최신 통계 자료를 구축하였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부문	통계명	기준년도
보건 복지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1차 진료 현황	2016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 가능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	2016
	각 응급출동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신청자현황)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급여자(인정자)현황)	2015
	노인복지시설현황(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 현황)	2015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수혜자 현황	2016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2015
	읍·면·동별 보육시설현황(보육통계>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현황)	2015

부문	통계명	기준년도
교육	시·군별 초/중학교 현황	2016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2016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2015
정주 생활 기반	시·군·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2010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2014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15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현황	2016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운행 횟수별 마을 수	2010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2015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2016
경제 활동 일자리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유무	2016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2016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 전담인력 고용 여부	2016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2016
문화 여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15
	시·군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관람 가능 문화행사프로그램 수	2015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2015
환경·경관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2014
안전	행정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16

○ 삶의 질 정책 관련 연구 보고서, 신문기사 제공

- 삶의 질 위원회 구성, 업무, 연혁 등을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였다.
- 이슈리포트,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 자료, 기타 농촌 정책 관련 연구 보고서 및 세미나 개최 자료를 제공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언론기사들을 취합하여 주요 기사들을(총 182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